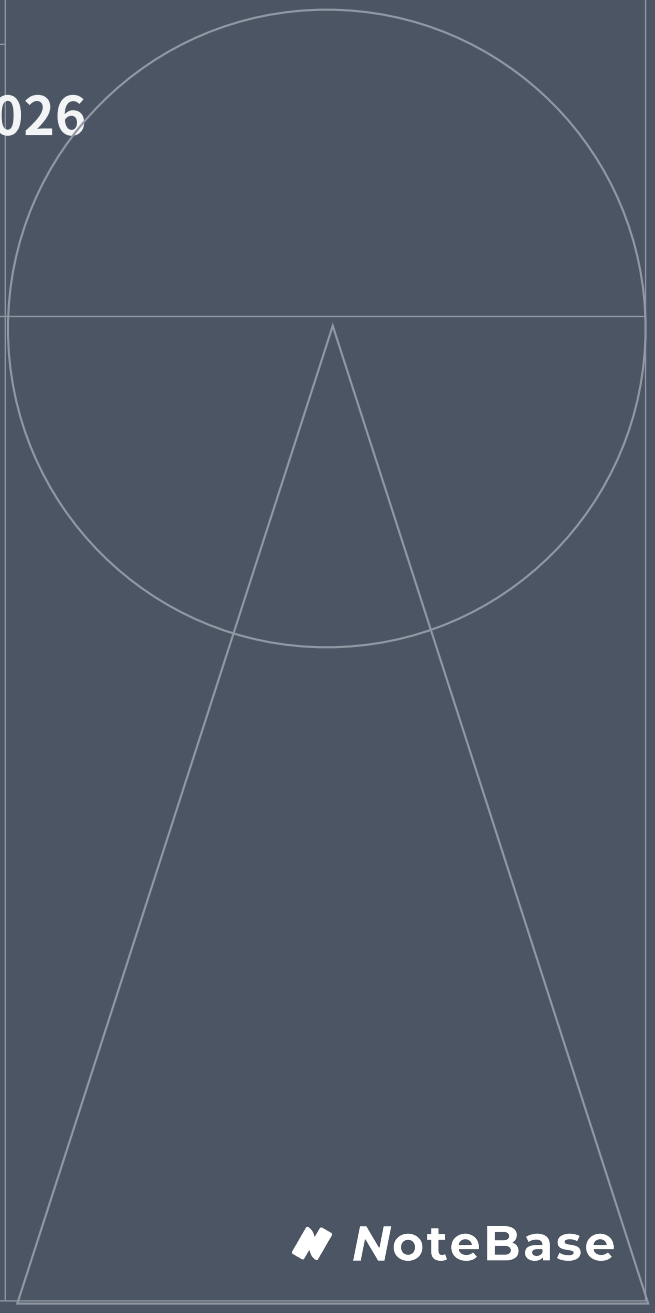
기출OX 해설집

전문직/세무사 · 재정학 · 2026



NoteBase

기출OX 해설집

전문직/세무사 · 재정학 · 2026

전문직/세무사 · 재정학 · 2026

문 1. 직접세와 간접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직접세는 법적 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일치한다.
ㄴ. 간접세는 직접세에 비해 조세저항이 작고 징세비용이 적게 소요된다.
ㄷ. 수직적 공평 측면에서 간접세가 직접세보다 우월하다.
ㄹ. 직접세이면서 물세(in rem tax)의 예는 재산세와 증여세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직접세와 간접세를 납세의무자와 담세자의 일치 여부, 조세저항·징세비용, 수직적 공평성으로 비교하고 직접세를 인세와 물세로 다시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직접세: 법률상 납세의무자와 실제 조세를 부담하도록 예정된 담세자가 일치하는 조세이다. 소득세·법인세처럼 납세자의 소득이나 인적 사정을 고려하기 쉬워 수직적 공평을 구현하는 데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간접세: 법률상 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서로 달라 조세 부담이 가격을 통해 전가되는 조세이다. 세금이 가격에 포함되어 조세저항이 비교적 작고 징수가 편리하지만, 저소득층의 소득 대비 부담이 커질 수 있어 수직적 공평성에서는 직접세보다 불리하다.
인세와 물세: 인세는 납세자의 인적 사정을 고려하여 과세하고, 물세는 과세물건을 중심으로 납세자의 인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과세한다. 재산세는 물세의 예이지만 증여세는 인세의 예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 ㄱ은 직접세의 정의에 맞고, ㄴ도 간접세가 가격에 포함되어 징수되므로 직접세보다 조세저항과 징세비용이 상대적으로 작다는 점에서 옳다. 따라서 옳은 진술은 ㄱ, ㄴ이다.
② X — ㄷ의 '간접세가 직접세보다 우월하다'가 틀렸다. 수직적 공평 측면에서는 납세능력을 반영하기 쉬운 직접세가 간접세보다 우월하므로, ㄷ을 빼고 ㄴ을 넣은 'ㄱ, ㄴ'이 옳다.
③ X — ㄹ에서 증여세를 물세로 분류한 부분이 틀렸다. 재산세는 직접세이면서 물세이지만 증여세는 직접세이면서 인세이므로, ㄹ을 빼고 ㄴ을 넣은 'ㄱ, ㄴ'이 옳다.
④ X — ㄷ이 틀린 진술인데 포함되어 있다. 수직적 공평성은 직접세가 상대적으로 우월하므로 ㄷ을 제외한 'ㄱ, ㄴ'이 옳다.
⑤ X — ㄷ과 ㄹ이 모두 틀리고, 옳은 ㄱ이 빠져 있다. 직접세가 수직적 공평성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하며 증여세는 인세이므로, 올바른 조합은 'ㄱ, ㄴ'이다.

오답 포인트

ㄴ의 '조세저항이 작다'는 간접세의 부담 자체가 작다는 뜻이 아니라 세금이 가격에 포함되어 납세자가 부담을 덜 뚜렷하게 인식한다는 뜻이다. 또한 직접세·간접세의 구분과 인세·물세의 구분은 서로 다른 분류 기준이므로, 직접세라고 해서 모두 물세가 되는 것은 아니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법률상 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같으면 직접세, 다르면 간접세로 구분한다. 공평성에서는 납세능력을 반영하기 쉬운 직접세가 수직적 공평에 유리하다고 판단한다. 인세·물세는 납세자의 인적 사정을 고려하는지를 별도로 확인한다.

암기 포인트

직접세는 납세자와 담세자가 일치하고 수직적 공평에 유리하다. 간접세는 조세저항과 징세비용이 작다. 재산세는 물세, 증여세는 인세이다.

NoteBase

문 2. 조세 부담액(T)과 소득(Y) 간에 $T = -300 + 0.3Y$와 같은 관계가 성립하는 경우, 옳지 않은 것은? (단, Y는 0보다 크다.)

① 소득세가 선형누진세이다.

② 소득 규모에 관계없이 한계세율이 일정하다.

③ 소득 증가시 평균세율이 증가한다.

④ 평균세율은 한계세율보다 항상 높다.

⑤ 세수탄력성이 1보다 큰 값을 갖는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조세함수에서 한계세율, 평균세율, 세수탄력성을 구하고 선형누진세의 성격을 판단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주어진 조세함수는 $T = -300 + 0.3Y$이다.
한계세율은 소득이 1만큼 증가할 때 조세가 얼마나 증가하는지를 나타내고, 평균세율은 소득 중 조세가 차지하는 비율이다.
세수탄력성은 조세의 변화율을 소득의 변화율로 나눈 값이며, 조세 부담이 양수인 구간에서 판단한다.

사용할 공식

한계세율: $MTR = \frac{dT}{dY}$
평균세율: $ATR = \frac{T}{Y}$
세수탄력성: $\varepsilon_T = \frac{dT}{dY}\frac{Y}{T} = \frac{MTR}{ATR}$

조세함수의 기울기는 한계세율이고, 조세 부담액을 소득으로 나누면 평균세율이 되므로 이 공식을 사용한다.

계산 과정

1. $MTR = \frac{dT}{dY} = 0.3$이므로 한계세율은 소득과 관계없이 일정하다.
2. $ATR = \frac{-300 + 0.3Y}{Y} = 0.3 - \frac{300}{Y}$이다. Y가 증가하면 $\frac{300}{Y}$가 작아지므로 평균세율은 증가하지만, 모든 $Y > 0$에서 $ATR < 0.3 = MTR$이다.
3. 조세 부담이 양수인 $T > 0$, 즉 $Y > 1000$인 구간에서 $\varepsilon_T = \frac{0.3Y}{-300 + 0.3Y}$이다. 분자는 분모보다 300만큼 크므로 $\varepsilon_T > 1$이다.

NoteBase

선지 판단

① O — 조세함수는 직선이고, 소득이 증가할수록 평균세율 $0.3 - \frac{300}{Y}$이 증가하므로 선형누진세이다.
② O — 한계세율은 조세함수의 기울기인 0.3으로 일정하다.
③ O — 소득이 증가하면 $\frac{300}{Y}$가 감소하므로 평균세율 $0.3 - \frac{300}{Y}$은 증가한다.
④ X — '평균세율은 한계세율보다 항상 높다'가 틀렸다. 올바르게는 모든 $Y > 0$에서 평균세율 $0.3 - \frac{300}{Y}$은 한계세율 0.3보다 낮다.
⑤ O — 조세 부담이 양수인 구간에서 세수탄력성은 $\frac{0.3Y}{-300 + 0.3Y} > 1$이다.

오답 포인트

'누진세이면 한계세율도 반드시 상승한다'고 생각하면 ①과 ②를 동시에 판단하기 어렵다. 이 문항의 선형누진세는 한계세율은 일정하지만 음의 절편 때문에 평균세율이 상승하는 구조이다. 또한 ④는 평균세율과 한계세율의 대소관계를 거꾸로 제시한 선지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일차 조세함수 $T = a + tY$가 나오면 기울기 t로 한계세율을 구하고, $T/Y = a/Y + t$로 평균세율을 구한 뒤 두 세율의 변화와 대소관계를 판단한다. 세수탄력성은 조세 부담이 양수인 구간에서 MTR/ATR로 비교한다.

암기 포인트

음의 절편을 가진 일차 조세함수는 한계세율은 일정하고 평균세율은 상승하며, 평균세율은 한계세율보다 낮다.

NoteBase

문 3. 알링햄-샌드모(M. G. Allingham and A. Sandmo)의 탈세 모형에 관련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납세자가 절대위험기피도 체감의 특성을 가진다고 가정한다.
ㄴ. 감사받을 확률의 증가와 벌금률의 증가가 탈루소득을 줄인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ㄷ. 세율 상승의 소득효과와 대체효과가 같은 방향으로 작용하므로 탈루소득을 더 크게 만든다.
ㄹ. 샌드모는 세율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유지하고 감사받을 확률과 벌금률 조정을 탈세 방지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ㄱ, ㄴ, ㄹ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알링햄-샌드모 탈세 모형에서 위험기피 성향의 가정과 세율·감사확률·벌금률 변화가 탈루소득에 미치는 방향을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정리

알링햄-샌드모 모형은 위험기피적인 납세자가 기대효용을 극대화하도록 신고소득을 선택한다고 본다. 이때 절대위험기피도 체감은 소득이 증가할수록 동일한 금액의 위험에 대한 기피 정도가 낮아지는 성향이다.
감사받을 확률이나 벌금률이 높아지면 탈세의 기대비용이 커지므로 신고소득은 증가하고 탈루소득은 감소한다.
세율이 오르면 탈세의 한계이익이 커지는 대체효과는 탈루소득을 늘리지만, 가처분소득 감소에 따른 소득효과는 절대위험기피도 체감 아래에서 탈루소득을 줄인다. 두 효과가 반대 방향이므로 세율 상승의 순효과는 확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ㄱ, ㄴ, ㄹ이 옳고 ㄷ은 틀리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ㄱ과 ㄴ은 옳지만 옳은 진술인 ㄹ을 빠뜨렸다. 올바른 조합은 ㄱ, ㄴ, ㄹ이다.
② X — ㄱ과 ㄹ은 옳지만 감사확률과 벌금률의 증가가 탈루소득을 줄인다는 ㄴ도 옳다. 올바른 조합은 ㄱ, ㄴ, ㄹ이다.
③ O — ㄱ, ㄴ, ㄹ은 모두 옳고, 세율 상승의 두 효과가 같은 방향이라고 한 ㄷ은 제외되어 있다.
④ X — ㄱ을 빠뜨리고 틀린 진술인 ㄷ을 포함하였다. ㄷ의 '같은 방향으로 작용하므로 탈루소득을 더 크게 만든다'가 틀렸으며, 올바르게는 소득효과와 대체효과가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여 세율 상승이 탈루소득에 미치는 순효과가 불분명하다. 올바른 조합은 ㄱ, ㄴ, ㄹ이다.
⑤ X — 틀린 진술인 ㄷ까지 포함하였다. ㄷ은 세율 상승의 소득효과와 대체효과가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므로 탈루소득의 변화 방향을 단정할 수 없다고 고쳐야 한다. 올바른 조합은 ㄱ, ㄴ, ㄹ이다.

출제자가 노린 함정

세율이 높아지면 탈세 유인이 커진다는 대체효과만 보고 ㄷ을 옳다고 판단하기 쉽다. 그러나 절대위험기피도 체감 아래에서는 가처분소득 감소로 위험부담을 줄이려는 소득효과가 탈세를 억제하므로 두 효과의 방향은 반대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감사확률과 벌금률의 상승은 탈세의 기대비용을 높이므로 탈루소득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확정한다. 세율 상승은 '대체효과는 탈세 증가, 소득효과는 탈세 감소'로 나누어 순효과가 불분명하다고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알링햄-샌드모: 감사확률·벌금률 상승은 탈세 감소, 세율 상승의 효과는 불분명이다.

NoteBase

문 4. 조세의 초과부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조세 부과시 초과부담은 후생(소비자잉여+생산자잉여) 감소분에서 조세 수입을 차감한 것이다.

② 조세 부과시 상대가격 체계의 변화에 의해 민간부문의 의사결정이 왜곡되어 발생한다.

③ 초과부담을 정확히 측정하려면 보상수요곡선을 사용해야 한다.

④ 세율이 높을수록,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클수록 초과부담은 커진다.

⑤ 대체재의 수가 적은 재화일수록 조세 부과의 초과부담은 커진다.

정답 5번

출제 포인트

조세의 초과부담이 무엇이며 세율과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초과부담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조세의 초과부담은 조세로 인해 민간의 선택이 왜곡되어 발생하는 사회적 순손실이다. 조세 부과에 따른 총잉여 감소분 가운데 정부의 조세 수입을 제외한 부분이며, 다른 조건이 같다면 세율이 높고 수요나 공급의 가격탄력성이 클수록 커진다. 대체재가 많을수록 소비자가 가격 변화에 쉽게 반응하므로 일반적으로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커진다.

선지별 해설

① O — 초과부담은 조세 부과로 감소한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의 합에서 정부가 얻은 조세 수입을 뺀 사회적 순손실이다.
② O — 조세가 상대가격을 바꾸면 소비와 생산의 선택이 조세 부과 전과 달라지며, 이 대체효과에 따른 자원배분 왜곡이 초과부담을 발생시킨다.
③ O — 정확한 후생변화를 측정할 때에는 효용수준을 일정하게 유지한 보상수요곡선을 이용한다. 보통수요곡선으로 구한 소비자잉여 변화는 소득효과가 섞인 근사치이다.
④ O — 다른 조건이 같다면 세율이 높을수록 거래량 왜곡이 커지고,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클수록 세후 가격 변화에 따른 수요량 감소가 커져 초과부담도 커진다.
⑤ X — 틀린 표현은 '대체재의 수가 적은 재화일수록 초과부담은 커진다'이다. 대체재가 적으면 일반적으로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작아 조세로 인한 수요량 변화와 초과부담이 작아진다. 올바르게는 '대체재의 수가 많은 재화일수록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커져 조세 부과의 초과부담이 커진다'이다.

오답 포인트

⑤는 대체재의 수와 수요의 가격탄력성 사이의 방향을 반대로 제시한 선지이다. 대체재가 적으면 소비자가 가격 상승에도 다른 재화로 옮기기 어려우므로 수요가 비탄력적이고, 조세에 따른 거래량 감소도 작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조세의 초과부담은 조세 수입 자체가 아니라 조세 때문에 사라진 거래와 선택 왜곡에서 발생한다고 판단한다. 탄력성 관련 선지는 '가격 변화에 수량이 크게 반응할수록 거래량 왜곡과 초과부담이 커진다'는 기준으로 판별한다.

암기 포인트

대체재 많음 → 수요가 탄력적 → 조세로 거래량이 크게 감소 → 초과부담 증가이다.

NoteBase

문 5. 조세의 전가와 귀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법인세 부담이 소비자에게 전가되었다면 후방전가(backward shifting)가 발생한 것이다.

② 어떤 조세를 동일한 세수의 다른 조세로 대체할 때 어떤 분배효과가 나오는가를 분석하는 것을 균형예산귀착이라 부른다.

③ 독점의 경우라도 조세부담이 소비자에게 모두 전가되지는 않는다.

④ 독점시장에서 조세 귀착은 공급곡선의 탄력성에 따라 달라진다.

⑤ 독점시장의 경우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작을수록 소비자 부담이 작아진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조세가 최초 납세의무자에게 부과된 뒤 가격·임금·이윤의 변화를 통해 누구에게 최종 부담되는지와, 조세귀착 분석의 유형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조세전가는 법률상 납세의무자에게 부과된 조세부담이 시장의 가격조정을 통해 다른 경제주체에게 옮겨 가는 현상이고, 조세귀착은 그 결과 실질적으로 누가 부담하는지를 뜻한다. 전방전가는 판매가격 상승을 통해 소비자에게 부담을 넘기는 것이고, 후방전가는 임금이나 원재료 가격 하락 등을 통해 생산요소 공급자에게 부담을 넘기는 것이다. 차별적 조세귀착은 동일한 세수의 한 조세를 다른 조세로 대체할 때의 분배효과를 비교하고, 균형예산귀착은 조세수입 증가와 그만큼의 정부지출 증가를 함께 분석한다. 독점기업은 공급곡선이 없으므로 조세의 귀착을 공급곡선의 탄력성으로 설명할 수 없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소비자에게 부담이 넘어가는 것은 후방전가가 아니라 전방전가이다. 후방전가는 임금이나 원재료 가격의 하락 등을 통해 생산요소 공급자에게 부담을 넘기는 경우이다.
② X — '균형예산귀착'이라는 표현이 틀렸다. 동일한 세수의 한 조세를 다른 조세로 대체하여 분배효과를 비교하는 것은 차별적 조세귀착이고, 균형예산귀착은 조세와 그 조세로 조달한 같은 규모의 정부지출이 분배에 미치는 결합효과를 분석한다.
③ O — 표준적인 독점모형에서 종량세가 부과되면 독점기업은 한계비용 증가에 맞추어 가격과 생산량을 조정하며, 세액 전부를 판매가격에 그대로 더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소비자 가격 상승분이 세액보다 작고, 기업도 이윤 감소의 형태로 조세부담의 일부를 진다.
④ X — 독점기업에는 가격별 공급량을 독립적으로 나타내는 공급곡선이 없으므로 '공급곡선의 탄력성에 따라'라는 표현이 틀렸다. 독점시장의 조세귀착은 수요조건과 비용조건에 따른 독점기업의 가격·생산량 조정으로 판단한다.
⑤ X —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작을수록 소비자 부담이 작아진다'는 방향이 반대이다. 다른 조건이 같다면 수요가 비탄력적일수록 가격 상승에 따른 수요 감소가 작아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부담이 커진다.

오답 포인트

①은 전방전가와 후방전가를 뒤바꾸고, ②는 차별적 조세귀착과 균형예산귀착을 바꾸어 놓았다. 또한 ④처럼 완전경쟁시장의 공급곡선 탄력성 논리를 독점시장에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부담이 소비자 쪽으로 이동하면 전방전가, 생산요소 공급자 쪽으로 이동하면 후방전가로 판단한다. 같은 세수의 조세끼리 대체하면 차별적 조세귀착, 조세와 같은 규모의 정부지출을 함께 보면 균형예산귀착이다.
독점시장에서는 공급곡선이 없다는 점을 먼저 확인하고 수요와 비용조건에 따른 가격조정을 살핀다.

암기 포인트

소비자 방향은 전방전가, 생산요소 방향은 후방전가이다. 조세 대 조세는 차별적 귀착, 조세와 지출의 결합은 균형예산귀착이다. 독점에는 공급곡선이 없다.

NoteBase

문 6. 수요함수가 $Q_d = 40 - \frac{1}{2}P$이고 공급함수가 $Q_s = -20 + P$인 완전경쟁시장에서, 정부가 단위당 12의 물품세를 생산자에게 부과할 때, 생산자와 소비자의 단위당 부담은?

① 생산자 10, 소비자 2

② 생산자 8, 소비자 4

③ 생산자 6, 소비자 6

④ 생산자 4, 소비자 8

⑤ 생산자 2, 소비자 10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물품세 부과 전후의 소비자가격과 생산자 수취가격을 비교하여 단위당 조세부담을 구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수요함수는 $Q_d = 40 - \frac{1}{2}P_c$, 공급함수는 $Q_s = -20 + P_p$이다. 여기서 P_c는 소비자가격, P_p는 생산자 수취가격이다. 생산자에게 단위당 12의 물품세를 부과하면 $P_c = P_p + 12$의 조세 쐐기가 생긴다. 구해야 할 값은 세금 부과 전 균형가격과 비교한 소비자가격의 상승분 및 생산자 수취가격의 하락분이다.

사용할 공식

세금 부과 전에는 $Q_d = Q_s$이고, 세금 부과 후에는 $Q_d(P_c) = Q_s(P_p)$와 $P_c - P_p = 12$가 동시에 성립한다. 조세의 법적 납부자가 생산자이더라도 경제적 부담은 세후 가격 변화에 따라 소비자와 생산자에게 나뉘므로 이 관계를 사용한다.

계산 과정

1. 세금 부과 전 균형은 $40 - \frac{1}{2}P = -20 + P$에서 구한다. 따라서 $60 = \frac{3}{2}P$이므로 균형가격은 $P = 40$이다.
2. 세금 부과 후 $P_p = P_c - 12$를 공급함수에 대입하면 $Q_s = -20 + (P_c - 12) = P_c - 32$이다.
3. $40 - \frac{1}{2}P_c = P_c - 32$이므로 $72 = \frac{3}{2}P_c$, 즉 $P_c = 48$이다. 따라서 $P_p = 48 - 12 = 36$이다.
4. 소비자 부담은 가격 상승분 $48 - 40 = 8$, 생산자 부담은 수취가격 하락분 $40 - 36 = 4$이다. 두 부담의 합은 세액 12와 일치한다.

NoteBase

선지 판단

① X — 생산자 부담은 10, 소비자 부담은 2가 아니다. 올바르게는 생산자 4, 소비자 8이다.
② X — 생산자 부담은 8, 소비자 부담은 4가 아니다. 올바르게는 생산자 4, 소비자 8이다.
③ X — 생산자와 소비자가 각각 6씩 부담하지 않는다. 올바르게는 생산자 4, 소비자 8이다.
④ O — 세후 소비자가격은 48로 8 상승하고 생산자 수취가격은 36으로 4 하락하므로 생산자 4, 소비자 8이 맞다.
⑤ X — 생산자 부담은 2, 소비자 부담은 10이 아니다. 올바르게는 생산자 4, 소비자 8이다.

오답 포인트

생산자에게 세금을 부과한다는 문구를 생산자가 세액 전부 또는 더 많이 부담한다는 뜻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 ①·②·⑤는 생산자와 소비자의 부담 배분을 잘못 잡은 선지이고, ③은 세액을 기계적으로 절반씩 나눈 선지이다. 경제적 조세부담은 법적 납세자가 아니라 세금 부과 전후의 소비자가격과 생산자 수취가격 변화로 판단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세전 균형가격을 구하고, 세후에는 소비자가격과 생산자 수취가격 사이에 단위세만큼의 쐐기를 둔다. 이후 소비자가격 상승분은 소비자 부담, 생산자 수취가격 하락분은 생산자 부담으로 계산하며 두 부담의 합이 단위세와 같은지 검산한다.

암기 포인트

단위세 부담은 법적 납세자가 아니라 가격 변화로 나뉜다. 소비자 부담은 세후 소비자가격의 상승분, 생산자 부담은 세후 수취가격의 하락분이다.

NoteBase

문 7. 경제적 이윤에 대한 과세라는 관점에서 법인세를 볼 경우, 옳지 않은 것은?

① 경제적 이윤은 기업의 수입에서 모든 기회비용을 차감한 나머지를 말한다.

② 법인세 과세대상은 경제적 이윤과 항상 일치한다.

③ 법인세에서 허용하는 감가상각은 통상 진정한 경제적 감가상각과 다르다.

④ 법인의 자기자본에 대한 귀속이자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비용처리를 허용하지 않는다.

⑤ 법인세의 감가상각률이 경제적 감가상각률과 일치하고, 법인의 한계투자가 차입된 자금에 의해 조달되면, 법인세는 순수한 경제적 이윤에 대한 과세로 볼 여지가 있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경제적 이윤과 세법상 법인세 과세대상의 차이, 특히 감가상각과 자기자본 기회비용의 처리 차이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경제적 이윤은 기업의 수입에서 명시적 비용뿐 아니라 자기자본의 기회비용 등 모든 기회비용을 뺀 나머지이다. 반면 법인세 과세대상은 세법이 인정하는 비용과 감가상각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경제적 이윤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 차입금 이자는 일반적으로 비용으로 공제되지만 자기자본에 대한 귀속이자는 대체로 공제되지 않는다는 차이가 핵심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경제적 이윤은 총수입에서 명시적 비용과 암묵적 비용을 포함한 모든 기회비용을 차감한 금액이다. 따라서 자기자본의 기회비용도 경제적 비용에 포함된다.

② X
틀린 표현은 '항상 일치한다'이다. 세법상 감가상각이 실제 경제적 감가상각과 다를 수 있고 자기자본의 귀속이자도 일반적으로 비용으로 공제되지 않으므로 법인세 과세대상과 경제적 이윤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올바르게는 '법인세 과세대상은 경제적 이윤과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이다.

③ O
법인세 계산에 쓰는 감가상각은 세법이 정한 내용연수와 상각방법에 따르는 반면, 경제적 감가상각은 자산의 실제 경제가치 감소를 뜻한다. 양자는 통상 일치하지 않는다.

④ O
자기자본에는 배당이나 유보이익 형태의 보상이 이루어지지만, 자기자본 사용에 따른 귀속이자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법인세 계산상 비용으로 공제되지 않는다. 따라서 세법상 과세소득에는 자기자본의 기회비용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다.

⑤ O
세법상 감가상각률이 경제적 감가상각률과 같으면 감가상각 차이가 사라진다. 또한 한계투자를 차입금으로 조달하고 그 이자가 비용으로 공제되면 자금의 기회비용도 과세표준에서 차감된다. 이러한 조건에서는 정상수익을 넘는 순수한 경제적 이윤이 과세대상으로 남는다고 볼 여지가 있다.

오답 포인트

②의 '항상'이 함정이다. 회계·세법상 과세소득을 경제적 이윤과 같은 개념으로 보면 감가상각 기준의 차이와 자기자본 귀속이자의 불공제를 놓치게 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법인세를 경제적 이윤 과세로 볼 수 있는지는 먼저 세법상 감가상각이 경제적 감가상각과 같은지, 다음으로 자금의 기회비용이 이자 공제 등을 통해 비용 처리되는지를 확인한다. 두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과세대상과 경제적 이윤이 달라질 수 있다.

암기 포인트

경제적 이윤은 모든 기회비용을 차감하지만, 법인세 과세소득은 세법상 비용만 차감한다. 핵심 차이는 감가상각과 자기자본 귀속이자이다.

NoteBase

문 8. 법인세 과세의 찬성 의견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평한 과세라는 개념은 오직 개인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② 법인은 강한 독자성을 갖고 있으며, 사회적 영향력도 점차 커지고 있다.

③ 법인이 사회적으로 받는 혜택에 대해 과세가 필요하다.

④ 정부가 법인의 행동에 영향을 주는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다.

⑤ 법인의 사내유보 이윤에 대한 적정과세 장치 역할을 한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법인세를 독립적으로 과세해야 한다는 찬성 논거와 이에 반대하는 논거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법인세 과세 찬성론은 법인의 독자적 실체와 사회적 영향력, 법인이 받는 공공서비스의 편익, 기업 행동을 유도하는 정책수단, 개인소득세를 보완하는 기능을 근거로 법인 단계의 과세가 필요하다고 본다. 반면 공평한 과세나 담세력은 자연인인 개인에게만 적용된다는 견해는 법인 자체에 독립적으로 과세하는 데 반대하는 논거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 '공평한 과세라는 개념은 오직 개인에 대해서만 적용된다'는 주장은 법인 자체의 담세력을 부정하므로 법인세 과세의 반대 논거이다. 찬성 논거로 고치면 법인도 독자적 경제 실체이므로 공평과세의 관점에서 과세할 수 있다고 해야 한다.
② O — 법인이 주주와 구별되는 강한 독자성을 지니고 사회적 영향력도 크다는 점은 법인을 독립된 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찬성 논거이다.
③ O — 법인은 법질서, 사회간접자본, 공공서비스 등으로부터 편익을 받으므로 그 편익에 대응하여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편익원칙의 찬성 논거이다.
④ O — 법인세의 세율이나 공제·감면 구조는 투자, 고용, 자금조달 등 법인의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정부의 정책수단이 된다는 찬성 논거이다.
⑤ O — 법인세가 없으면 법인이 이윤을 사내에 유보하여 주주 단계의 개인소득세 과세를 늦출 수 있다. 법인세는 유보이윤에 우선 과세하여 이러한 과세 이연을 막는 개인소득세의 보완장치가 된다는 찬성 논거이다.

오답 포인트

①은 '공평한 과세'라는 긍정적인 표현 때문에 찬성론처럼 보이지만, 핵심은 '오직 개인에 대해서만'이라는 한정이다. 이 표현은 법인의 독립적 담세력을 부정하므로 찬성이 아니라 반대 논거이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법인의 독자적 실체·수익 또는 편익·정책수단·개인소득세 보완을 강조하면 법인세 찬성론으로 판단한다. 담세력과 공평과세는 개인에게만 귀속되고 법인세 부담은 결국 개인에게 전가된다고 강조하면 반대론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찬성론의 네 축은 독자적 법인, 사회적 편익, 정책수단, 개인소득세 보완이다. '과세는 오직 개인에게만'은 반대론이다.

NoteBase

문 9. 부가가치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부가가치세는 특정 물품에만 과세하는 소비과세이다.

② 부가가치세는 1954년 독일에서 공업 부문만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적인 과세제도로 처음 등장했다.

③ 미국은 1960년대 중반부터 부가가치세를 도입하여 과세하고 있다.

④ 순소득형 부가가치세는 일정 기간의 총수입에서 모든 중간투입물의 구입비용을 빼고, 그것에서 자본재의 감가상각비를 추가적으로 제외한 것을 과세 대상으로 한다.

⑤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는 도입 이래 국세 세목 가운데 세수가 가장 크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부가가치세가 일반소비세라는 점과 총생산형·순소득형·소비형 부가가치세의 자본재 처리 차이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부가가치세는 생산·유통의 각 단계에서 새로 창출된 부가가치에 과세하는 일반소비세이다.
총생산형은 중간투입액만 공제하고 자본재 구입액이나 감가상각비를 공제하지 않는다. 순소득형은 중간투입액과 감가상각비를 공제한다. 소비형은 중간투입액과 자본재 구입액 전액을 공제한다.

선지별 해설

① X — 틀린 표현은 '특정 물품에만 과세'이다.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재화와 용역 전반에 넓게 과세하는 일반소비세이며, 특정 물품에 선별적으로 과세하는 세금은 개별소비세와 같은 선택적 소비세이다.
② X — 틀린 표현은 '독일'이다. 부가가치세는 1954년 프랑스에서 공업 부문을 중심으로 부분적으로 도입되었고 이후 전면적으로 확대되었다.
③ X — 틀린 표현은 '미국은 1960년대 중반부터 부가가치세를 도입'이다. 미국에는 연방 차원의 부가가치세가 없으며, 주와 지방정부가 소매판매세를 부과한다.
④ O — 총수입에서 중간투입물 구입비용을 빼고 다시 자본재의 감가상각비를 공제하면 순소득에 해당하는 부가가치가 남는다. 이는 순소득형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다.
⑤ X — 틀린 표현은 '도입 이래 국세 세목 가운데 세수가 가장 크다'이다. 세목별 세수의 크기와 순위는 연도에 따라 달라지며, 부가가치세가 도입 이후 계속 가장 큰 세목이었던 것은 아니다. 실제로 최근 연간 국세수입에서도 소득세가 부가가치세보다 크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④에서 '자본재'를 보고 소비형으로 오인하기 쉽다. 자본재 구입액 전액을 즉시 공제하면 소비형이지만, 감가상각비만 공제하면 순소득형이다. 또한 ②는 '1954년'과 '공업 부문의 부분 도입'은 맞지만 국가명을 프랑스에서 독일로 바꾼 선지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과세표준 유형은 자본비용의 공제 범위로 판단한다. 자본비용을 공제하지 않으면 총생산형, 감가상각비만 공제하면 순소득형, 자본재 구입액 전액을 공제하면 소비형이다.

암기 포인트

자본 공제 없음은 총생산형, 감가상각만 공제는 순소득형, 자본재 전액 공제는 소비형이다. 최초의 부분 도입은 1954년 프랑스이다.

NoteBase

문 10. 국내 및 해외의 조세제도 개혁 동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우리나라는 부가가치세의 과세 범위를 확장해 왔다.

② 각국의 법인세 세율은 경제 상황, 역사, 전통 등에 따라 서로 다르다.

③ 배당금의 이중과세 방지 대책으로 배당세액공제제도 등이 시행되고 있다.

④ 우리나라는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를 도입했는데, 전자는 부가가치세, 후자는 소득세 및 법인세와 연계되어 있다.

⑤ 대부분의 국가들은 법인세와 소득세 간 완전 통합을 이루었다.

정답 5번

쟁점

이 문제는 국내외 조세제도 개혁에서 부가가치세 과세 범위, 배당 이중과세 조정, 지방세와 국세의 연계, 법인세와 소득세의 통합 정도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은 이중과세를 일부 완화하는 제도가 있다는 사실과 법인세·소득세가 완전히 통합되었다는 주장을 구별하는 것이다.

용어 풀이

배당의 경제적 이중과세는 법인의 이익에 법인세가 부과된 뒤 그 세후이익이 주주에게 배당될 때 다시 소득세가 부과되는 현상이다. 배당세액공제는 주주 단계에서 세액을 공제하여 이러한 중복 부담을 조정하는 제도이다.

핵심 구분

조세 통합에는 완전 통합만 있는 것이 아니다. 국가들은 고전적 과세, 낮은 배당세율, 원천징수, 배당소득 일부 제외, 부분 세액공제, 완전 세액공제 등 서로 다른 방식을 사용한다. 따라서 이중과세를 일부 완화한다는 사실만으로 법인세와 소득세가 완전히 통합되었다고 볼 수 없다. 한국의 현행 소득세법은 배당세액공제를 두고 있으며, 지방세법은 지방소비세의 과세표준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과 연계하고 개인·법인지방소득의 범위를 각각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상 소득에 연계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우리나라는 전문직 용역을 과세대상에 포함하고 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특례를 축소하는 등 부가가치세 면세·특례 범위를 줄여 과세 기반을 넓혀 왔다.

② O. 법인세율은 국가마다 재정 수요, 경제 여건, 제도의 역사와 정책 선택이 달라 서로 동일하지 않다. 실제로 국가별 명목 법인세율과 과세구조에는 차이가 있다.

③ O. 배당세액공제는 법인 단계에서 과세된 이익이 주주 단계에서 다시 과세되는 부담을 조정하는 장치이다.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에도 배당세액공제가 규정되어 있으므로 옳다.

④ O. 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기초로 계산되고, 지방소득세는 개인소득과 법인소득을 각각 소득세법상 소득과 법인세법상 소득에 연계한다. 두 지방세가 각각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법인세와 연계된다는 설명은 옳다.

⑤ X. 틀린 표현은 '대부분의 국가들은 법인세와 소득세 간 완전 통합을 이루었다'이다. 국가별 제도는 고전적 과세부터 부분 통합과 완전 통합까지 다양하며, 완전 통합이 대부분이라고 할 수 없다. 올바르게는 '각국은 배당의 이중과세를 완화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사용하지만, 법인세와 소득세를 완전히 통합한 국가가 대부분인 것은 아니다'라고 해야 한다.

오답 포인트

③의 배당세액공제처럼 이중과세를 조정하는 장치가 널리 쓰인다는 사실을 ⑤의 '완전 통합'과 혼동하기 쉽다. 일부 완화 또는 부분 통합과 완전 통합은 같은 개념이 아니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조세제도 비교 문항에서는 '조정·완화'와 '완전 제거·완전 통합'을 구별한다. 국가별 제도가 여러 유형으로 병존한다면 '대부분', '모든', '완전'과 같은 강한 단정은 우선 의심한다.

암기 포인트

배당세액공제는 이중과세 조정이고, 조정이 곧 완전 통합은 아니다.

NoteBase

문 11. 조세지출이 정당성을 부여받기 위해 필요한 검증 과정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조세지출을 통한 민간부문의 특정 행위 촉진이 바람직해야 한다.
ㄴ. 조세지출은 항상 효율성을 우선적으로 충족해야 한다.
ㄷ. 민간부문을 대신하여 정부가 조세지출로 관여하는 이유가 명확해야 한다.
ㄹ. 민간부문의 특정 행위 촉진 방법으로 조세지출 사용이 최선인가를 검토해야 한다.
ㅁ. 조세지출 규모는 매년 일정 비율로 늘어나야 한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ㄹ
③ ㄱ, ㄷ, ㄹ
④ ㄴ, ㄷ, ㄹ
⑤ ㄷ, ㄹ, ㅁ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조세지출이 정당화되려면 정책목표의 타당성, 정부 개입의 필요성, 조세지출이라는 수단의 적합성을 차례로 검토해야 한다는 점을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조세지출은 비과세·감면·공제·세액공제 등으로 특정 활동이나 계층을 지원하여 직접지출과 유사한 정책 효과를 내는 제도이다.
정당성 검증의 핵심은 ① 촉진하려는 민간행위가 바람직한가, ② 정부가 개입해야 할 명확한 이유가 있는가, ③ 여러 정책수단 가운데 조세지출이 가장 적합한가이다. 따라서 옳은 항목은 ㄱ, ㄷ, ㄹ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ㄱ과 ㄷ은 타당하지만 ㄴ이 틀렸다. 조세지출은 효율성만을 항상 최우선으로 충족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목표의 타당성, 정부 개입의 필요성, 수단의 적합성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 따라서 ㄴ을 빼고 ㄹ을 넣은 'ㄱ, ㄷ, ㄹ'이 옳다.
② X — ㄱ과 ㄹ은 타당하지만 ㄴ이 틀렸다. 정부가 민간부문에 관여할 명확한 이유가 있는지도 검증해야 하므로 ㄴ을 빼고 ㄷ을 넣은 'ㄱ, ㄷ, ㄹ'이 옳다.
③ O — ㄱ은 정책목표의 바람직성, ㄷ은 정부 개입의 필요성, ㄹ은 조세지출 수단의 적합성을 각각 검증하는 항목이다. 세 항목이 모두 정당성 검증에 필요하다.
④ X — ㄷ과 ㄹ은 타당하지만 ㄴ이 틀렸고 ㄱ이 빠졌다. 효율성을 언제나 우선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촉진하려는 민간행위가 바람직한지를 검토해야 하므로 'ㄱ, ㄷ, ㄹ'로 고쳐야 한다.
⑤ X — ㄷ과 ㄹ은 타당하지만 ㅁ이 틀렸다. 조세지출 규모를 매년 일정 비율로 늘리는 것은 정당성의 요건이 아니며, 규모는 정책의 필요성과 효과 및 재정 여건에 따라 검토되어야 한다. 따라서 ㅁ을 빼고 ㄱ을 넣은 'ㄱ, ㄷ, ㄹ'이 옳다.

오답 포인트

ㄴ의 '항상'과 '우선적으로', ㅁ의 '매년 일정 비율'처럼 획일적인 표현이 함정이다. 조세지출의 정당성은 특정 기준 하나나 기계적인 규모 증가가 아니라 목표·개입·수단의 세 단계 검증으로 판단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조세지출 정당성 문항에서는 '그 행위를 장려할 가치가 있는가 → 정부가 개입할 이유가 있는가 → 조세지출이 다른 수단보다 적합한가'의 순서로 각 항목을 대조한다. '항상', '무조건', '매년 일정하게'와 같은 절대적 표현은 이 검증 구조와 맞는지 확인한다.

암기 포인트

조세지출 정당성은 '목표의 타당성—개입의 필요성—수단의 적합성'이다.

NoteBase

문 12. 근로소득세 부과가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근로소득만 존재한다고 가정한다.)

① 여가가 정상재일 경우, 비례소득세 부과로 인한 소득효과와 대체효과의 상대적 크기가 총노동공급의 증감 여부를 결정한다.

② 여가가 정상재일 경우, 비례소득세 부과로 인한 소득효과가 대체효과보다 크면 노동공급곡선이 후방굴절한다.

③ 여가가 정상재일 경우, 비례소득세 부과로 인한 대체효과가 소득효과보다 크다면 총노동공급은 증가한다.

④ 여가가 열등재일 경우, 비례소득세 부과로 인한 대체효과와 소득효과 모두 노동공급을 감소시킨다.

⑤ 여가가 열등재일 경우, 정액세(lump-sum tax)를 부과하면 소득효과만 존재하여 노동공급은 감소한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비례소득세로 세후임금이 낮아질 때 대체효과와 소득효과가 노동공급에 미치는 방향을 여가의 정상재·열등재 여부에 따라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대체효과: 비례소득세로 세후임금이 낮아지면 여가의 기회비용이 낮아지므로 여가가 늘고 노동공급은 감소한다.
소득효과: 세금으로 실질소득이 감소할 때 여가가 정상재이면 여가가 줄어 노동공급이 증가하고, 여가가 열등재이면 여가가 늘어 노동공급이 감소한다.
정액세는 세후임금을 바꾸지 않으므로 대체효과 없이 소득효과만 발생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여가가 정상재이면 비례소득세의 대체효과는 노동공급을 감소시키고 소득효과는 노동공급을 증가시킨다. 두 효과의 방향이 반대이므로 상대적 크기에 따라 총노동공급의 증감이 결정된다.
② O. 여가가 정상재일 때 임금 상승의 소득효과가 대체효과보다 크면 임금이 오를수록 노동공급이 감소하는 후방굴절 구간이 나타난다. 같은 구간에서 비례소득세로 세후임금이 하락하면 소득효과가 우세하여 노동공급이 증가한다.
③ X. 틀린 표현은 '대체효과가 소득효과보다 크다면 총노동공급은 증가한다'이다. 여가가 정상재일 때 비례소득세의 대체효과는 노동공급을 감소시키므로, 대체효과가 소득효과보다 크면 총노동공급은 감소한다.
④ O. 여가가 열등재이면 소득 감소로 여가 수요가 늘어 노동공급이 감소한다. 비례소득세의 대체효과도 여가를 늘려 노동공급을 감소시키므로 두 효과의 방향이 같다.
⑤ O. 정액세는 세후임금을 바꾸지 않아 대체효과가 없고 소득효과만 발생한다. 여가가 열등재이면 소득 감소에 따라 여가가 늘므로 노동공급은 감소한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③은 비례소득세 부과로 세후임금이 '하락'하는 상황이라는 점이 함정이다. 이때 대체효과는 여가를 늘리고 노동을 줄이므로, 대체효과가 더 크면 노동공급은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감소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세금이 세후임금을 바꾸는지 확인한다. 비례소득세이면 대체효과와 소득효과를 모두 따지고, 정액세이면 소득효과만 본다. 다음으로 여가가 정상재이면 두 효과가 반대 방향이고, 열등재이면 두 효과가 모두 노동공급 감소 방향임을 적용한다.

암기 포인트

비례세의 대체효과는 노동 감소, 정상여가의 소득효과는 노동 증가, 열등여가의 소득효과는 노동 감소이다. 정액세에는 소득효과만 있다.

NoteBase

문 13. 시점간 소비선택 모형에서, 이자소득세 부과가 소비와 저축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미래소득은 영(0)이며 현재소비와 미래소비는 모두 정상재이다.)

① 세후 이자율이 하락하므로 현재소비의 상대가격이 상승하게 된다.

② 대체효과에 의해 현재소비가 증가하고 미래소비는 감소한다.

③ 소득효과에 의해 현재소비와 미래소비 모두 감소한다.

④ 저축의 증감 여부는 대체효과와 소득효과의 상대적인 크기에 의존한다.

⑤ 현재소비의 변화는 대체효과와 소득효과의 상대적인 크기에 의해 결정된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이자소득세로 세후 이자율이 하락할 때 현재소비와 미래소비의 상대가격이 어떻게 변하고, 대체효과와 소득효과가 소비 및 저축에 어떤 방향으로 작용하는지를 묻는다.

핵심 개념

현재소득을 Y, 세후 이자율을 r, 현재소비와 미래소비를 각각 C_1, C_2라고 하면 예산제약은 $C_1 + \frac{C_2}{1+r} = Y$이다. 따라서 현재소비 한 단위의 미래소비 표시 상대가격은 $1 + r$이고, 미래소비 한 단위의 현재소비 표시 상대가격은 $\frac{1}{1+r}$이다. 세후 이자율이 하락하면 현재소비는 상대적으로 싸지고 미래소비는 상대적으로 비싸진다. 대체효과는 현재소비를 늘리고 미래소비를 줄이는 반면, 실질구매력 감소에 따른 소득효과는 두 재화가 모두 정상재이므로 현재소비와 미래소비를 모두 줄인다.

선지별 해설

① X — 틀린 표현은 '현재소비의 상대가격이 상승'한다는 부분이다. 세후 이자율이 하락하면 현재소비 한 단위의 미래소비 표시 상대가격인 $1 + r$는 하락한다. 올바르게는 현재소비의 상대가격은 하락하고 미래소비의 상대가격은 상승한다고 해야 한다.

② O — 현재소비가 상대적으로 싸지고 미래소비가 상대적으로 비싸지므로 대체효과에 의해 현재소비는 증가하고 미래소비는 감소한다.

③ O — 세후 이자율 하락은 미래소비를 살 수 있는 실질구매력을 낮춘다. 현재소비와 미래소비가 모두 정상재이므로 소득효과는 두 소비를 모두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④ O — 저축은 $S = Y - C_1$이다. 대체효과에 따른 현재소비 증가는 저축을 줄이지만, 소득효과에 따른 현재소비 감소는 저축을 늘리므로 저축의 순변화는 두 효과의 상대적 크기에 달려 있다.

⑤ O — 현재소비에 대해 대체효과는 증가 방향, 소득효과는 감소 방향으로 작용한다. 두 효과가 반대이므로 현재소비의 최종 변화는 상대적 크기에 의해 결정된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①은 이자율 하락을 곧바로 현재소비의 가격 상승으로 연결하는 함정이다. 현재소비 한 단위를 포기하면 얻는 미래소비가 $1+r$이므로 이자율이 낮아질수록 현재소비의 기회비용, 즉 미래소비 표시 상대가격은 하락한다. 또한 ④의 저축효과와 ⑤의 현재소비 효과는 $S = Y - C_1$ 관계 때문에 서로 반대 방향으로 나타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예산제약 $C_1 + \frac{C_2}{1+r} = Y$에서 상대가격 변화를 확인한다. 세후 이자율 하락은 현재소비를 상대적으로 싸게 하므로 대체효과는 C_1 증가·C_2 감소이고, 실질구매력 감소와 정상재 조건을 적용한 소득효과는 C_1·C_2 모두 감소이다. 마지막으로 서로 반대인 효과가 합쳐지는 현재소비와 저축의 순변화는 모호하다고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세후 이자율 하락: 현재소비 상대가격 하락 → 대체효과는 현재소비 증가, 소득효과는 정상재 소비 감소 → 현재소비와 저축의 순변화는 불확정이다.

NoteBase

문 14. 신고전파 투자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보유 자본재의 사용과 관련된 기업의 기회비용은 보유 자본재의 사용으로 희생된 임대료 수입을 말한다.

② 신고전파 투자이론에서는 기회비용을 사용자비용이라고 부른다.

③ 완전경쟁 자본재 임대시장에서는 자본재 임대를 전문으로 하는 기업의 이윤은 영(0)이다.

④ 완전경쟁 자본재 임대시장에서 기업의 이윤이 영(0)이라는 것은 임대료 수입 흐름의 현재가치와 그 자본재의 구입비용이 일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⑤ 실증연구의 공통적인 결과에 따르면, 자본의 사용자비용이 낮아지면 실제 투자가 현저하게 증가한다.

정답 3, 5번

출제 포인트

신고전파 투자이론에서 자본의 사용자비용이 무엇인지, 완전경쟁 자본재 임대시장의 무차익 조건이 무엇을 뜻하는지, 이론적 예측과 실증 결과를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자본의 사용자비용은 기업이 자본재를 한 기간 보유·사용하면서 부담하는 경제적 비용이다. 여기에는 자금의 기회비용과 감가상각비가 포함되고, 자본가격 상승에 따른 자본이득은 비용에서 차감된다. 완전경쟁 임대시장의 무차익 조건은 자본재 구입가격과 미래 순임대수입의 현재가치가 일치하여 한계적인 자본 보유의 초과이윤 또는 순현재가치가 0이 된다는 뜻이다. 이는 임대기업 전체의 회계상 이윤이 언제나 0이라는 뜻과는 다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기업이 소유한 자본재를 직접 사용하면 다른 기업에 빌려주어 받을 수 있었던 임대료를 포기한다. 이 포기한 임대료가 자가 보유 자본 사용의 기회비용이다.
② O. 신고전파 투자이론은 자본재를 보유·사용하는 데 드는 기회비용을 자본의 사용자비용으로 나타낸다. 기업은 자본의 한계생산가치와 사용자비용을 비교하여 원하는 자본량을 결정한다.
③ X. 틀린 표현은 '기업의 이윤은 영(0)이다'이다. 완전경쟁이라는 조건만으로 임대기업 전체의 회계상 이윤이 항상 0이 되는 것은 아니다. 올바르게는 무차익 균형에서 한계적인 자본 보유로 얻는 경제적 초과이윤 또는 순현재가치가 0이 되며, 기업 전체의 경제적 이윤이 0이 되려면 장기균형과 자유로운 진입·퇴출 등의 조건이 추가로 필요하다.
④ O. 무차익 조건에서는 자본재 구입비용과 그 자본재가 앞으로 창출하는 순임대수입 흐름의 현재가치가 일치한다. 어느 한쪽이 더 크면 자본재의 매입 또는 매각을 통한 차익거래가 발생하므로 경쟁을 거쳐 일치하게 된다.
⑤ X. 틀린 표현은 '실증연구의 공통적인 결과'와 '현저하게 증가한다'이다. 이론상 사용자비용의 하락은 원하는 자본량과 투자를 늘리는 방향으로 작용하지만, 실제 투자의 사용자비용 반응은 작거나 연구마다 다르게 추정된다. 올바르게는 사용자비용 하락이 투자를 증가시키는 이론적 방향은 분명하지만, 현저한 증가가 실증연구의 공통된 결과라고 단정할 수 없다.

오답 포인트

③은 '무차익으로 한계적 자본 보유의 초과이윤이 0'이라는 명제를 '임대기업의 이윤이 언제나 0'으로 확대한다. ⑤는 이론적 방향과 실증적으로 확인된 반응의 크기를 바꾸어 놓는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사용자비용 문항에서는 먼저 이론과 실증을 나눈다. 이론에서는 사용자비용 하락이 원하는 자본량과 투자를 늘리는 방향이고, 임대시장 균형에서는 자본가격과 미래 순임대수입의 현재가치가 일치한다. 다만 '완전경쟁'만으로 기업 전체의 이윤이 항상 0이라고 하거나, 실제 투자 반응이 반드시 크다고 단정한 표현은 틀린 것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사용자비용 하락은 이론상 투자 증가 방향이다. 무차익은 한계적 자본 보유의 초과이윤 0이고, 실증상 투자 반응이 항상 큰 것은 아니다.

NoteBase

문 15. 경기과열에 대한 대응으로 투자를 억제하는 조치에 해당하는 것은?

① 은행 금리 인하

② 투자세액공제 확대

③ 특정기간조세감면 폐지

④ 가속상각제도 도입

⑤ 준비금제도 시행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경기과열을 진정시키기 위해 투자수익을 낮추거나 투자비용과 조세부담을 높이는 조치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투자 억제정책은 기업의 자금조달비용이나 투자에 따른 조세부담을 높여 투자를 줄이는 정책이다. 반대로 금리 인하, 투자세액공제, 가속상각, 준비금제도와 같은 혜택은 투자비용 또는 세 부담을 낮추므로 투자를 촉진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은행 금리 인하는 차입비용을 낮춰 기업의 투자수요를 늘리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틀린 표현은 '인하'이며, 투자 억제를 위한 통화정책 방향은 은행 금리 인상이다.

② X
투자세액공제 확대는 투자액의 일정 부분을 세액에서 공제하여 투자 후 세 부담을 낮추므로 투자를 촉진한다. 틀린 표현은 '확대'이며, 투자 억제 방향은 투자세액공제의 축소 또는 폐지이다.

③ O
특정 기간 동안 주어지던 조세감면을 폐지하면 기업의 투자 관련 세 부담이 커지고 투자 후 수익성이 낮아지므로 투자를 억제한다.

④ X
가속상각제도는 자산 취득 초기에 감가상각비를 크게 계상하여 과세를 뒤로 미루고 세 부담의 현재가치를 낮추므로 투자를 촉진한다. 틀린 표현은 '도입'이며, 투자 억제 방향은 가속상각 혜택의 축소 또는 폐지이다.

⑤ X
준비금제도는 일정 금액을 손금으로 인정하는 방식 등을 통해 기업의 현재 세 부담을 줄이고 내부자금 축적을 돕기 때문에 투자를 촉진한다. 틀린 표현은 '시행'이며, 투자 억제 방향은 준비금 혜택의 축소 또는 폐지이다.

오답 포인트

③의 '조세감면 폐지'와 ②·④·⑤의 조세지원 확대 효과를 반대로 판단하기 쉽다. 조세감면을 없애면 세 부담이 커져 투자가 억제되지만, 공제·가속상각·준비금 혜택을 주면 세 부담이 줄어 투자가 촉진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각 조치가 기업의 이자비용이나 세 부담을 높이는지부터 판단한다. 비용·세 부담이 높아지면 투자 억제, 낮아지면 투자 촉진이다.

암기 포인트

감면 폐지는 투자 억제, 공제·가속상각·준비금은 투자 촉진이다.

NoteBase

문 16. 모딜리아니-밀러(F.Modigliani and M. Miller)의 배당무의미성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불완전한 자본시장 가정하에서 배당정책은 기업의 가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② 배당무의미성이론은 거래비용이 없다는 등 비현실적인 가정을 기초로 한 결론이다.

③ 주주는 기업의 배당정책에 영향을 받는다.

④ 대부분의 국가는 소득세 상 배당금과 자본이득을 똑같이 취급한다.

⑤ 모든 실증연구에 따르면, 조세는 기업의 배당정책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모딜리아니-밀러의 배당무의미성이론이 성립하는 자본시장 가정과 배당정책의 효과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배당무의미성이론은 완전자본시장과 일정한 투자정책을 전제로 할 때 기업가치가 배당과 유보 사이의 이익 배분 방식에 좌우되지 않는다는 이론이다. 조세·거래비용·정보비대칭 등이 없고 투자자가 주식 매매로 원하는 현금흐름을 스스로 만들 수 있다는 가정이 핵심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 틀린 표현은 '불완전한 자본시장 가정하에서'이다. 배당정책이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결론은 완전자본시장을 전제로 한다.
② O — 거래비용과 조세가 없고 정보비대칭도 없는 완전자본시장이라는 현실성이 강하지 않은 가정에서 도출된 이론이므로 옳다.
③ X — 틀린 표현은 '주주는 기업의 배당정책에 영향을 받는다'이다. 이론의 가정 아래에서는 주주가 주식을 사거나 팔아 원하는 현금흐름을 만들 수 있으므로 주주의 부는 기업의 배당정책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④ X — 틀린 표현은 '배당금과 자본이득을 똑같이 취급한다'이다. 배당과 자본이득은 세율뿐 아니라 과세 시점 등에서 다르게 취급될 수 있으므로 동일하게 취급된다고 일반화할 수 없다.
⑤ X — 틀린 표현은 '모든 실증연구'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이다. 조세 차이는 투자자의 배당 선호와 기업의 배당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조세의 영향을 일률적으로 부정할 수 없다.

오답 포인트

①의 '불완전한'과 ②의 '거래비용이 없다'가 핵심 함정이다. 현실의 시장마찰이 없는 완전자본시장에서는 배당이 무의미하지만, 조세·거래비용 같은 시장마찰이 존재하면 배당정책이 기업가치나 투자자 선호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배당무의미성이론 선지에서는 먼저 완전자본시장, 무조세, 무거래비용, 정보비대칭 부재, 일정한 투자정책이라는 전제를 확인한다. 불완전자본시장이나 조세 효과를 전제로 하면서 배당이 무의미하다고 단정하면 틀린 설명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완전자본시장에서는 배당이 무의미하고, 조세·거래비용 등 시장마찰이 생기면 배당이 의미를 가질 수 있다.

NoteBase

문 17. 정부지출 증대를 위한 국채 발행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채를 전액 시중에서 소화할 경우, 이자율이 상승하여 민간투자가 줄어드는 구축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② 국채 발행에 따른 구축효과의 크기는 케인즈학파보다 통화주의자가 더 크다고 주장한다.

③ 민간 보유 국채 잔액이 증가함에 따라 소비지출이 감소하는 현상을 러너(Lerner)효과라 부른다.

④ 국채를 전액 중앙은행이 인수할 경우, 시중에서 소화하는 경우보다 총수요 증대효과가 더 크게 나타난다.

⑤ 국채를 전액 중앙은행이 인수할 경우, 통화량이 증가하므로 인플레이션이 유발된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국채를 민간이 인수하는 경우와 중앙은행이 인수하는 경우의 구축효과·통화량 효과를 구분하고, 국채가 민간소비에 미치는 러너효과의 방향을 판단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민간 인수: 정부가 시중 자금을 조달하므로 이자율 상승과 민간투자 감소를 통한 구축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중앙은행 인수: 본원통화와 통화량이 늘어 이자율 상승 압력이 완화되므로 민간 인수보다 총수요 확대효과가 크지만 물가상승 압력이 생긴다.
러너효과: 민간이 보유한 국채를 순자산으로 인식하면 부의 효과로 소비지출이 증가하는 현상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국채를 시중에서 전액 소화하면 정부의 자금수요 증가로 이자율이 상승할 수 있고, 그 결과 이자율에 민감한 민간투자가 감소하는 구축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② O. 통화주의자는 재정지출 확대가 이자율을 높여 민간투자를 크게 밀어낸다고 보므로, 케인즈학파보다 국채 발행에 따른 구축효과를 더 크게 평가한다.
③ X. 틀린 표현은 '소비지출이 감소'이다. 러너효과에서는 민간 보유 국채 잔액의 증가가 민간의 순자산 증가로 인식되어 부의 효과를 일으키므로 소비지출이 증가한다.
④ O. 중앙은행이 국채를 전액 인수하면 통화량이 증가하고 민간 자금시장에서 정부와 민간이 자금을 두고 경쟁하는 정도가 작아진다. 따라서 시중 소화 때보다 이자율 상승과 투자 구축이 약해져 총수요 증대효과가 더 크게 나타난다.
⑤ O. 중앙은행의 국채 인수는 통화량을 늘리는 화폐조달 방식이므로 총수요와 물가에 상승 압력을 주어 인플레이션을 유발한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③은 국채 증가에 따른 미래 조세부담을 예상해 현재 소비를 줄이는 리카도 대등정리의 논리와, 국채를 순자산으로 보아 현재 소비를 늘리는 러너효과를 뒤바꾼 선지이다. 또한 국채 발행 여부만 볼 것이 아니라 인수 주체가 민간인지 중앙은행인지에 따라 이자율·통화량 경로가 달라진다는 점을 구분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민간 인수이면 '시중 자금 흡수 → 이자율 상승 → 민간투자 감소'를, 중앙은행 인수이면 '통화량 증가 → 구축효과 완화 → 총수요와 물가 상승'을 연결한다. 러너효과가 제시되면 국채를 민간 순자산으로 인식하므로 소비가 증가한다고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민간 인수는 구축, 중앙은행 인수는 통화팽창, 러너효과는 국채의 부의 효과에 따른 소비 증가이다.

NoteBase

문 18. 공공요금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는 경우, 한계비용 가격설정은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실현한다.

② 시설의 사용 용량이 제한된 단기의 경우, 가격은 한계비용에서 경제적 지대를 더한 수준에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③ 이부가격(two-part tariff)을 적용하면 공급자의 결손을 줄일 수 있으나, 효율적인 자원배분은 실현하지 못한다.

④ 평균비용 가격설정은 공급자에게 비용절감의 유인을 제공하지 못한다.

⑤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매우 작은 필수품에 대한 램지가격설정은 분배 측면에서 불공평을 야기할 수 있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자연독점의 공공요금 설정 방식별로 자원배분의 효율성, 공급자의 수지 보전, 비용절감 유인, 분배 효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한계비용 가격설정: 가격을 한계비용과 같게 정하여 소비자의 추가 소비 편익과 사회적 추가 생산비용을 일치시키는 방식이다. 자원배분은 효율적이지만 규모의 경제가 있는 자연독점에서는 평균비용이 한계비용보다 커 결손이 생길 수 있다.
평균비용 가격설정: 가격을 평균비용과 같게 정하여 총수입으로 총비용을 보전하는 방식이다. 결손은 피할 수 있지만 가격이 한계비용보다 높아 효율성이 떨어지고 비용절감 유인이 약하다.
이부가격: 사용량에 비례하는 종량요금과 고정 가입료를 함께 부과하는 방식이다. 종량요금을 한계비용과 같게 하여 효율성을 확보하고, 고정요금으로 결손을 보전할 수 있다.
램지가격설정: 총비용을 보전하면서 후생손실을 최소화하도록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작은 재화에 더 높은 가격 인상률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한계비용 가격설정은 가격을 한계비용과 일치시키므로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실현한다. 규모의 경제가 있으면 결손이 발생할 수 있지만, 이는 수지 문제이지 효율성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② O. 단기에 시설 용량이 고정되어 희소한 경우에는 한계비용에 용량 제약으로 생기는 경제적 지대, 즉 혼잡비용을 더한 가격이 효율적인 이용을 유도한다.
③ X. 틀린 표현은 '효율적인 자원배분은 실현하지 못한다'이다. 실제로는 종량요금을 한계비용과 같게 정하면 효율적인 소비량을 유도할 수 있고, 고정 가입료로 공급자의 결손도 줄이거나 보전할 수 있다.
④ O. 평균비용에 맞추어 비용을 보전해 주는 가격설정은 비용이 요금에 반영되므로 공급자가 스스로 비용을 줄일 유인이 약하다.
⑤ O. 램지가격설정은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작은 재화에 더 높은 가격 인상률을 적용한다. 필수품은 저소득층의 지출 부담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 있으므로 분배 측면의 불공평을 야기할 수 있다.

오답 포인트

③은 이부가격이 결손을 줄인다는 점만 제시한 뒤 효율성은 달성하지 못한다고 뒤집은 선지이다. 고정요금은 비용을 보전하고 종량요금은 한계비용에 맞추어 효율성을 확보한다는 두 요금의 역할을 분리해야 한다. 또한 ①에서는 '결손 발생'과 '자원배분 비효율'을 같은 뜻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각 가격설정 방식이 무엇을 목표로 하는지 확인한다. 가격과 한계비용의 일치는 효율성, 평균비용과의 일치는 수지 균형, 이부가격의 고정요금은 결손 보전, 램지가격의 역탄력성 원칙은 후생손실 최소화와 연결된다.

암기 포인트

한계비용은 효율성·결손, 평균비용은 수지 균형·유인 약화, 이부가격은 종량요금으로 효율성·고정요금으로 결손 보전, 램지가격은 비탄력적 수요에 높은 인상률이다.

NoteBase

문 19. 우리나라 지방교부세의 종류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역발전교부세

② 보통교부세

③ 부동산교부세

④ 소방안전교부세

⑤ 특별교부세

정답 1번

쟁점

이 문제는 「지방교부세법」이 정한 지방교부세의 종류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은 법정 명칭 네 가지에 지역발전교부세가 포함되는지를 판단하는 것이다.

용어 풀이

지방교부세는 국가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고 필요한 재원을 보장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재원이다.

핵심 구분

「지방교부세법」 제3조는 지방교부세를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소방안전교부세의 네 종류로 구분한다. 지역발전교부세는 이 조문에 열거된 지방교부세의 종류가 아니다.

선지별 해설

① X — 지역발전교부세는 「지방교부세법」 제3조가 정한 지방교부세의 종류가 아니다. 틀린 표현: 지역발전교부세 → 올바르게는 법정 종류 네 가지 중 하나가 아니라는 표현이다.
② O — 보통교부세는 같은 조문에 명시된 지방교부세의 종류이다.
③ O — 부동산교부세는 같은 조문에 명시된 지방교부세의 종류이다.
④ O — 소방안전교부세는 같은 조문에 명시된 지방교부세의 종류이다.
⑤ O — 특별교부세는 같은 조문에 명시된 지방교부세의 종류이다.

오답 포인트

‘지역발전’이 지방재정의 목적에 어울리는 말이라는 이유만으로 공식 명칭처럼 받아들이는 것이 함정이다. 이 문항은 정책 목적이 아니라 법률에 열거된 정확한 명칭을 묻는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지방교부세의 종류를 묻는 문항에서는 보통·특별·부동산·소방안전의 네 명칭과 선지를 대조한다. 이 네 가지 밖의 그럴듯한 정책 명칭은 법정 종류에서 제외한다.

암기 포인트

지방교부세 네 종류는 '보통·특별·부동산·소방안전'이다.

문 20. 정부에 대한 유기체적 견해(organic view)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회를 하나의 자연적 유기체로 본다.

② 정부의 존재 이유는 오직 개인을 위해 기여하는 데 있다.

③ 개인은 유기체의 한 부분씩을 구성하며, 정부는 그 유기체의 심장부이다.

④ 개인은 사회의 한 부분으로서만 의미를 가지며, 전체의 이익에 봉사하는 것이 개인의 미덕이 된다.

⑤ 전체주의적 사고를 기반으로 한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정부에 대한 유기체적 견해와 기계론적 견해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기준은 사회 전체가 개인과 구별되는 고유한 목적을 가지는지, 아니면 정부가 개인의 목적을 위한 수단인지이다.

핵심 개념

유기체적 견해: 사회를 하나의 자연적 유기체로 보고, 개인을 그 구성 부분으로 보며, 정부가 사회 전체의 공동 목적을 실현한다고 본다.
기계론적 견해: 정부는 개인들이 자신의 목적을 더 잘 달성하기 위해 만든 장치이므로 개인을 위해 봉사하는 수단이라고 본다.
따라서 유기체적 견해는 사회 전체의 목적을, 기계론적 견해는 개인의 목적을 우선적인 판단 기준으로 삼는다.

선지별 해설

① O. 유기체적 견해는 사회를 각 부분이 결합된 하나의 자연적 유기체로 파악한다.
② X. 틀린 표현은 '정부의 존재 이유는 오직 개인을 위해 기여하는 데 있다'이다. 이는 정부를 개인의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보는 기계론적 견해에 해당한다. 유기체적 견해에서는 정부가 개인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공동 목적과 이익을 실현한다고 본다.
③ O. 유기체적 견해에서 개인은 유기체를 이루는 부분이고, 정부는 전체를 통합하고 이끄는 중심부에 비유된다. 따라서 정부를 유기체의 심장부로 보는 설명은 이에 부합한다.
④ O. 개인은 사회 전체의 구성 부분으로서 의미를 가지며, 전체의 이익에 기여하는 것이 개인의 미덕이라고 보는 것은 유기체적 견해의 특징이다.
⑤ O. 유기체적 견해는 개인보다 사회 전체의 목적과 이익을 앞세우므로 전체주의적 사고와 연결된다.

오답 포인트

②는 '개인을 위해 기여한다'는 표현 때문에 그럴듯해 보이지만, 바로 그 표현이 기계론적 견해의 핵심이다. 유기체적 견해에서는 개인이 전체를 위한 구성 부분이고, 기계론적 견해에서는 정부가 개인을 위한 수단이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사회 전체의 고유한 목적·개인은 전체의 일부·정부는 중심부’가 나오면 유기체적 견해로 판단한다. ‘개인의 목적·정부는 개인이 만든 수단·정부는 개인에게 봉사’가 나오면 기계론적 견해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유기체적 견해는 개인이 전체의 일부이고, 기계론적 견해는 정부가 개인의 수단이다.

NoteBase

문 21. 후생경제학의 기본정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기본정리 성립을 위한 선호와 생산기술에 대한 전제조건은 만족한다고 하자.)

① 경쟁균형은 파레토 효율적이며, 모든 효율적 배분은 민간에 의해 자발적으로 달성된다.

② 경쟁균형은 파레토 효율적이며, 역으로 파레토 효율적 배분은 적절한 재분배를 통해 경쟁균형으로 달성될 수 있다.

③ 파레토 효율적 배분은 경쟁균형이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정부 개입이 필요하지 않다.

④ 모든 경쟁균형이 파레토 효율적이지는 않으며, 재분배를 통해 효율성이 달성될 수 있다.

⑤ 효율적 배분은 항상 경쟁균형보다 파레토 열등하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후생경제학의 제1기본정리와 제2기본정리가 각각 경쟁균형과 파레토 효율성의 관계를 어느 방향으로 설명하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제1기본정리: 일정한 전제조건 아래 모든 경쟁균형은 파레토 효율적이라는 정리이다. 키워드는 '경쟁균형 → 파레토 효율'이다.
제2기본정리: 일정한 전제조건 아래 모든 파레토 효율적 배분은 적절한 초기 부존의 재분배를 거친 뒤 경쟁균형으로 달성할 수 있다는 정리이다. 키워드는 '파레토 효율 → 재분배 후 경쟁균형'이다.
두 정리는 효율성과 형평성을 분리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정부가 재분배로 형평성에 관한 목표를 정하고, 시장의 가격기구가 그 목표 배분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게 할 수 있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경쟁균형이 파레토 효율적이라는 부분은 제1기본정리에 맞지만, '모든 효율적 배분은 민간에 의해 자발적으로 달성된다'는 부분이 틀리다. 올바르게는 모든 파레토 효율적 배분이 적절한 초기 부존의 재분배를 거친 뒤 경쟁균형으로 달성될 수 있다고 해야 한다.

② O
앞부분은 제1기본정리의 '경쟁균형 → 파레토 효율'을, 뒷부분은 제2기본정리의 '파레토 효율 → 적절한 재분배 후 경쟁균형'을 정확히 설명한다.

③ X
'파레토 효율적 배분은 경쟁균형'이라고 조건 없이 역관계를 단정하고 '정부 개입이 필요하지 않다'고 한 부분이 틀리다. 올바르게는 적절한 재분배를 선행하면 파레토 효율적 배분을 경쟁균형으로 달성할 수 있다고 해야 한다.

④ X
'모든 경쟁균형이 파레토 효율적이지는 않다'는 부분이 틀리다. 주어진 전제조건 아래에서는 모든 경쟁균형이 파레토 효율적이다. 재분배는 경쟁균형의 비효율을 고치는 수단이 아니라 원하는 파레토 효율적 배분을 시장균형으로 구현하기 위한 수단이다.

⑤ X
'효율적 배분은 항상 경쟁균형보다 파레토 열등하다'는 부분이 틀리다. 파레토 효율적 배분은 다른 실현 가능한 배분에 의해 파레토 지배될 수 없으며, 경쟁균형도 주어진 전제조건 아래 파레토 효율적이다.

오답 포인트

제1기본정리의 방향과 제2기본정리의 역방향을 단순히 뒤집어 생각하는 것이 함정이다. 특히 ①과 ③은 제2기본정리에서 필요한 '적절한 재분배'라는 조건을 빼고 자발적 달성이나 무개입을 주장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경쟁균형에서 출발하면 제1기본정리에 따라 파레토 효율성을 판단한다. 파레토 효율적 배분에서 출발해 경쟁균형으로 구현하는지를 묻는다면 제2기본정리의 적절한 초기 부존 재분배 조건이 있는지를 확인한다.

암기 포인트

제1기본정리는 '시장균형이면 효율', 제2기본정리는 '효율적 목표는 재분배 후 시장균형'이다.

NoteBase

문 22. 두 재화 x와 y를 소비하는 두 소비자로 구성된 순수교환경제에서, 소비자 1과 2의 효용함수는 각각 $u_1(x_1, y_1) = x_1 y_1$과 $u_2(x_2, y_2) = x_2 y_2^2$이며, 초기부존은 각각 $(3, 1)$과 $(0, 3)$이다. 다음 배분 $((x_1, y_1), (x_2, y_2))$ 중 파레토 효율적 배분은?

① $((1.5, 1), (1.5, 2))$

② $((1.5, 1), (1.5, 3))$

③ $((1.5, 2), (1.5, 2))$

④ $((2, 2), (1, 2))$

⑤ $((2, 2), (2, 2))$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배분의 자원가능성을 확인한 뒤, 두 소비자의 한계대체율이 같은지를 이용해 파레토 효율적 배분을 찾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경제 전체의 부존량은 $x = 3, y = 4$이다. 두 효용함수는 각 재화의 소비가 늘면 효용이 증가하므로, 파레토 효율적 배분에서는 가용 자원을 남기지 않는다. 모든 소비량이 양수인 내부배분에서는 두 소비자의 한계대체율이 같아야 한다.

사용할 공식

소비자 1의 한계대체율은
$MRS_1 = \frac{MU_{x_1}}{MU_{y_1}} = \frac{y_1}{x_1}$
이고, 소비자 2의 한계대체율은
$MRS_2 = \frac{MU_{x_2}}{MU_{y_2}} = \frac{y_2^2}{2x_2 y_2} = \frac{y_2}{2x_2}$
이다. 따라서 내부배분의 효율성 조건은
$\frac{y_1}{x_1} = \frac{y_2}{2x_2}$
이다. 이 조건은 두 소비자의 재화 간 주관적 교환비율이 같아 더 이상의 상호이익 교환이 불가능함을 뜻한다.

NoteBase

계산 과정

먼저 각 선지에서 $x_1 + x_2 = 3, y_1 + y_2 = 4$인지 확인한다. 자원가능성을 충족하는 ②, ③, ④에 대해 한계대체율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②: $MRS_1 = 1/1.5 = 2/3, MRS_2 = 3/(2 \times 1.5) = 1$
③: $MRS_1 = 2/1.5 = 4/3, MRS_2 = 2/(2 \times 1.5) = 2/3$
④: $MRS_1 = 2/2 = 1, MRS_2 = 2/(2 \times 1) = 1$
④만 자원가능성과 한계대체율 일치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

선지 판단

① X. x는 모두 배분되지만 $y_1 + y_2 = 3$이어서 총부존량 4 중 1이 남는다. 두 소비자 모두 y가 늘면 효용이 증가하므로 남은 y를 한 소비자에게 주어도 다른 소비자의 효용을 낮추지 않고 그 소비자의 효용을 높일 수 있다. 올바르게는 가용 자원을 모두 배분해야 한다.
② X. 총소비량은 (3, 4)로 자원가능하지만 $MRS_1 = 2/3, MRS_2 = 1$로 서로 다르므로 추가적인 상호이익 교환이 가능하다. 올바르게는 내부배분에서 $MRS_1 = MRS_2$가 되어야 한다.
③ X. 총소비량은 (3, 4)로 자원가능하지만 $MRS_1 = 4/3, MRS_2 = 2/3$로 서로 다르므로 파레토 효율적이지 않다. 올바르게는 자원가능성뿐 아니라 두 소비자의 한계대체율도 같아야 한다.
④ O. 총소비량이 (3, 4)로 총부존량과 일치하고, $MRS_1 = MRS_2 = 1$이므로 파레토 효율적 배분이다.
⑤ X. $x_1 + x_2 = 4$로 총부존량 3을 초과하므로 이 경제에서 실현할 수 없는 배분이다. 올바르게는 $x_1 + x_2 = 3$을 충족해야 한다.

오답 포인트

자원가능성만 확인하거나 한계대체율만 비교하면 오답이 된다. ①은 자원이 남아 비효율적이고, ⑤는 애초에 실현 불가능하다. ②와 ③은 자원을 모두 배분했지만 한계대체율이 일치하지 않는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순수교환경제의 배분 문제에서는 먼저 각 재화의 소비량 합이 총부존량과 같은지 확인하고, 효용이 단조증가하며 소비량이 모두 양수이면 각 소비자의 한계대체율을 계산해 서로 같은지 확인한다.

암기 포인트

파레토 효율적 내부배분은 '자원 전부 배분 + 한계대체율 일치'이다.

NoteBase

문 23. 어느 독점기업이 직면하는 수요가 $P = 120 - \frac{1}{2}Q$이고, 한계비용이 $MC = Q$라 하자. 이 독점기업의 생산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후생손실(social welfare loss)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Q는 생산량이다.)

ㄱ. 이 독점기업의 영업을 폐지하면,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보다 사회후생이 증가한다.
ㄴ. 정부가 $P = 100$ 수준에서 최고가격제를 실시하면, 사회후생손실은 감소한다.
ㄷ. 정부가 $P = 80$ 수준에서 최고가격제를 실시하면, 사회후생손실은 0으로 감소한다.
ㄹ. 정부가 $P = 80$ 수준에서 최고가격제를 실시하면, 사회후생손실은 300만큼 감소한다.

① ㄱ
② ㄱ, ㄴ
③ ㄷ, ㄹ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독점기업의 한계수입과 한계비용을 이용해 독점생산량을 구하고, 최고가격제가 생산량과 사회후생손실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수요함수는 $P = 120 - \frac{1}{2}Q$이고 한계비용은 $MC = Q$이다. 독점기업은 $MR = MC$에서 생산하며, 사회적으로 효율적인 생산량은 $P = MC$에서 결정된다. 사회후생손실은 독점생산량과 효율적 생산량 사이에서 수요곡선과 한계비용곡선이 만드는 삼각형의 면적이다.

사용할 공식

총수입과 한계수입은 다음과 같다.
$TR = PQ = 120Q - \frac{1}{2}Q^2, \qquad MR = 120 - Q$
독점균형은 $MR = MC$, 효율적 생산량은 $P = MC$로 구한다. 이는 독점기업이 이윤극대화를 위해 한계수입과 한계비용을 일치시키는 반면, 사회후생은 소비자의 한계편익인 가격과 한계비용이 같을 때 극대화되기 때문이다.

NoteBase

계산 과정

1. 독점균형은 $120 - Q = Q$이므로 $Q_m = 60$이고, $P_m = 120 - \frac{1}{2}(60) = 90$이다.
2. 효율적 생산량은 $120 - \frac{1}{2}Q = Q$이므로 $Q^* = 80$이고 $P^* = 80$이다.
3. 독점생산량 $Q_m = 60$에서 수요가격은 90, 한계비용은 60이므로 기존 사회후생손실은 $\frac{1}{2} \times (80 - 60) \times (90 - 60) = 300$이다.
4. 최고가격 100은 독점가격 90보다 높아 구속력이 없으므로 생산량과 사회후생손실이 변하지 않는다.
5. 최고가격 80에서는 $Q = 80$까지 가격 80으로 판매할 수 있고 $MC = 80$이 되는 $Q = 80$에서 생산이 결정된다. 효율적 생산량과 같으므로 사회후생손실은 0이 되고, 기존보다 300 감소한다.

선지별 해설

① X — ㄱ은 틀리다. 영업을 계속해 $Q = 60$을 생산하면 0부터 60까지 한계편익이 한계비용보다 커서 양(+)의 사회후생이 발생한다. 영업 폐지는 이를 없애므로 사회후생을 증가시키지 않는다. 틀린 표현 '영업을 폐지하면 사회후생이 증가한다'는 '영업을 폐지하면 사회후생이 감소한다'로 고쳐야 한다.

② X — ㄱ과 ㄴ이 모두 틀리다. 최고가격 100은 규제 전 독점가격 90보다 높아 구속력이 없으므로 사회후생손실을 감소시키지 않는다. 'ㄱ, ㄴ'은 'ㄷ, ㄹ'로 고쳐야 한다.

③ O — 최고가격 80에서는 생산량이 효율적 생산량 $Q = 80$으로 늘어 사회후생손실이 0이 된다. 규제 전 손실이 300이었으므로 손실 감소분도 300이다. 따라서 ㄷ과 ㄹ이 모두 옳다.

④ X — ㄷ과 ㄹ은 옳지만 ㄴ은 틀리다. 최고가격 100은 독점가격 90보다 높아 아무 제약도 주지 않는다. 'ㄴ, ㄷ, ㄹ'은 'ㄷ, ㄹ'로 고쳐야 한다.

⑤ X — ㄷ과 ㄹ은 옳지만 ㄱ과 ㄴ은 틀리다. 폐업은 양(+)의 사회후생을 없애고, 최고가격 100은 비구속적이다. 'ㄱ, ㄴ, ㄷ, ㄹ'은 'ㄷ, ㄹ'로 고쳐야 한다.

오답 포인트

최고가격이 기존 독점가격보다 높으면 가격을 실제로 낮추지 못하는 비구속적 규제라는 점이 핵심 함정이다. 또한 독점 때문에 사회후생손실이 발생하더라도 독점기업의 생산 자체가 만드는 사회후생까지 음(-)인 것은 아니므로, 독점을 폐업시키는 것과 생산량을 효율적 수준으로 늘리는 것을 구분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MR = MC$로 독점가격과 독점생산량을 구하고, $P = MC$로 효율적 생산량을 구한다. 그다음 최고가격이 독점가격보다 낮아 실제로 구속하는지 확인하고, 규제 후 생산량이 효율적 생산량에 도달하는지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독점은 $MR = MC$, 효율은 $P = MC$이다. 최고가격이 기존 독점가격보다 높으면 비구속적이고, 효율가격과 같으면 사중손실이 0이 될 수 있다.

NoteBase

문 24. 자연독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자연독점 현상이 발생하는 구간의 각 생산량 수준에서 한계비용은 평균비용보다 작다.

② 한계비용으로 가격을 설정하는 경우, 이윤극대화 조건을 만족하므로 양(+)의 경제적 이윤을 달성할 수 있다.

③ 평균비용으로 가격을 설정하면 사회적으로 효율적인 생산량에 도달할 수 있다.

④ 한계비용이 체증하는 모든 구간에서 자연독점 현상이 발생한다.

⑤ 규모의 불경제하에서 자연독점으로 인한 시장실패가 발생한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자연독점이 발생하는 비용 구조와 한계비용 가격설정·평균비용 가격설정의 차이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자연독점은 관련 생산량 범위에서 한 기업이 시장수요 전체를 생산하는 것이 여러 기업이 나누어 생산하는 것보다 비용이 적게 드는 상태이다. 전형적으로 규모의 경제가 지속되어 평균비용이 하락하며, 이 구간에서는 한계비용이 평균비용보다 작다.
한계비용 가격설정은 가격을 한계비용과 같게 하여 배분 효율성을 달성하지만 자연독점기업에는 손실을 발생시킨다. 평균비용 가격설정은 가격을 평균비용과 같게 하여 경제적 이윤을 0으로 만들지만 효율적 생산량보다 적게 생산하게 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 평균비용이 하락하는 자연독점 구간에서는 추가 1단위의 비용인 한계비용이 평균비용보다 작다. 따라서 옳다.

② X — 틀린 표현은 '이윤극대화 조건을 만족하므로 양(+)의 경제적 이윤'이다. 독점기업의 이윤극대화 조건은 일반적으로 $MR = MC$이고, 한계비용 가격설정은 $P = MC$이다. 자연독점 구간에서는 $MC < AC$이므로 $P = MC < AC$가 되어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다. 올바르게는 '한계비용 가격설정은 배분 효율성을 달성하지만 기업에 손실을 발생시킨다'이다.

③ X — 틀린 표현은 '사회적으로 효율적인 생산량'이다. 평균비용 가격설정은 $P = AC$로 경제적 이윤을 0으로 만들지만, 자연독점 구간에서는 $AC > MC$이므로 가격이 한계비용보다 높다. 따라서 생산량은 $P = MC$인 사회적 효율 생산량보다 적다. 올바르게는 '평균비용 가격설정은 손익분기 생산량을 달성하지만 사회적으로 효율적인 생산량에는 미달한다'이다.

④ X — 틀린 표현은 '한계비용이 체증하는 모든 구간'이다. 한계비용의 증가 여부만으로 자연독점을 판단할 수 없다. 한계비용이 증가하더라도 평균비용보다 낮으면 평균비용은 하락할 수 있고, 핵심은 관련 생산량 범위에서 한 기업의 생산비용이 더 낮은 비용의 열가산성이다. 올바르게는 '관련 생산량 범위에서 비용함수가 열가산적일 때 자연독점이 발생한다'이다.

⑤ X — 틀린 표현은 '규모의 불경제하'이다. 규모의 불경제에서는 생산 규모가 커질수록 평균비용이 상승하므로 여러 기업보다 한 기업이 생산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자연독점의 비용 조건과 맞지 않는다. 올바르게는 '전형적으로 규모의 경제가 지속되는 구간에서 자연독점이 발생한다'이다.

오답 포인트

②와 ③은 가격규제의 목적을 뒤바꾼 함정이다. $P = MC$는 효율성을 달성하지만 손실이 생기고, $P = AC$는 손실을 막지만 효율 생산량보다 적게 생산한다. ④는 한계비용의 기울기와 평균비용의 하락 여부를 혼동하게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자연독점의 핵심을 관련 생산량 범위의 비용 열가산성과 전형적인 평균비용 하락으로 잡는다. 그다음 $P = MC$이면 효율성·손실, $P = AC$이면 손익분기·과소생산이라는 대응 관계로 선지를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자연독점은 규모의 경제와 평균비용 하락, 한계비용 가격은 효율·적자, 평균비용 가격은 수지균형·과소생산이다.

NoteBase

문 25. 순수공공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혼잡한 무료 국도는 순수공공재이다.
ㄴ.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소비할 수 있는 재화이다.
ㄷ. 중앙정부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볼펜은 순수공공재이다.
ㄹ. 지방정부에서 여름에 무료로 제공하는 얼음 생수는 순수공공재이다.

① ㄱ
② ㄴ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ㄴ, ㄷ, ㄹ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순수공공재를 누가 제공하는지나 무료인지가 아니라 소비의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으로 판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순수공공재는 한 사람의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 가능량을 줄이지 않는 비경합성과, 대가를 내지 않은 사람을 소비에서 배제하기 어려운 비배제성을 모두 가진 재화이다. 정부가 무료로 제공하더라도 소비하면 수량이 줄어드는 물건은 사적재이며, 무료라는 사실만으로 공공재가 되지는 않는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ㄱ만 옳다고 한 선택지이다. 혼잡한 무료 국도는 이용자가 늘수록 다른 이용자의 통행 여건이 나빠져 경합성이 발생하므로 순수공공재가 아니다. 틀린 표현은 '혼잡한 무료 국도는 순수공공재이다'이며, 올바르게는 혼잡하지 않은 국도는 순수공공재의 성격을 가질 수 있지만 혼잡한 무료 국도는 비경합성을 충족하지 못한다.

② O
ㄴ만 옳다고 한 선택지이다. 순수공공재는 비배제성 때문에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사람도 소비에서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무임승차가 가능하다.

③ X
ㄱ과 ㄴ이 모두 옳다고 한 선택지이다. ㄴ은 옳지만 ㄱ은 혼잡으로 인해 경합성이 발생하므로 틀리다. 틀린 포함 항목은 ㄱ이며, 올바른 조합은 ㄴ만 포함한 것이다.

④ X
ㄴ과 ㄷ이 모두 옳다고 한 선택지이다. 무료 볼펜은 한 사람이 가져가면 다른 사람이 그 볼펜을 소비할 수 없어 경합적이고, 물리적으로 특정 사람에게 배분할 수 있어 배제도 가능하므로 순수공공재가 아니다. 틀린 포함 항목은 ㄷ이며, 올바른 조합은 ㄴ만 포함한 것이다.

⑤ X
ㄴ, ㄷ, ㄹ이 모두 옳다고 한 선택지이다. 볼펜과 얼음 생수는 정부가 무료로 제공하더라도 한 사람이 소비하면 남은 수량이 줄어드는 사적재이다. 틀린 포함 항목은 ㄷ과 ㄹ이며, 올바른 조합은 ㄴ만 포함한 것이다.

오답 포인트

'무료'와 '정부 제공'을 공공재의 판별 기준으로 착각하기 쉽다. 무료 국도도 혼잡하면 경합성이 생기고, 정부가 나누어 주는 볼펜이나 생수도 소비 수량이 줄어드는 사적재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각 재화에 대해 한 사람의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량을 줄이는지와 대가를 내지 않은 사람을 배제할 수 있는지를 차례로 확인한다. 두 질문에 각각 '줄이지 않는다'와 '배제하기 어렵다'가 성립해야 순수공공재이다.

암기 포인트

순수공공재는 정부 제공이나 무료 여부가 아니라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의 결합으로 판단한다.

NoteBase

문 26. 어느 경제에서 공공재에 대한 개별수요가 서로 다른 두 그룹이 있으며 그룹 1은 6명, 그룹 2는 4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룹 1에 속한 각 소비자의 공공재에 대한 개별수요는 $P_1 = 30 - \frac{1}{6}Q$이며, 그룹 2에 속한 각 소비자의 공공재에 대한 개별수요는 $P_2 = 60 - \frac{1}{2}Q$이다. 공공재 생산의 평균비용이 모든 생산량 Q에서 $AC = 240$으로 일정하다고 할 때, 효율적 공공재 공급을 위한 각 그룹별 개별소비자의 부담은 얼마인가?

① $P_1 = 5, P_2 = 10$

② $P_1 = 10, P_2 = 20$

③ $P_1 = 15, P_2 = 20$

④ $P_1 = 20, P_2 = 30$

⑤ $P_1 = 20, P_2 = 40$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공공재의 효율적 공급 조건인 새뮤얼슨 조건을 이용하여 효율적 공급량을 구하고, 그 공급량에서 각 개인의 한계편익을 린달 부담가격으로 계산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그룹 1은 6명이고 각 개인의 수요는 $P_1 = 30 - \frac{1}{6}Q$이다.
그룹 2는 4명이고 각 개인의 수요는 $P_2 = 60 - \frac{1}{2}Q$이다.
평균비용이 모든 생산량에서 240으로 일정하므로 총비용은 $TC = 240Q$, 한계비용은 $MC = 240$이다.
구해야 할 값은 효율적 공급량에서 그룹별 개별소비자가 부담하는 가격 P_1과 P_2이다.

사용할 공식

공공재의 효율적 공급 조건은 모든 소비자의 한계편익을 수직 합산한 값이 한계비용과 같아지는 것이다.
$6P_1 + 4P_2 = MC$
공공재는 모든 소비자가 같은 수량을 소비하므로 개인별 수요를 수량 방향으로 더하지 않고, 동일한 Q에서 각 개인의 지불의사를 사람 수만큼 합산한다.

NoteBase

계산 과정

1. 전체 한계편익을 구한다.
$6\left(30-\frac{1}{6}Q\right)+4\left(60-\frac{1}{2}Q\right)=420-3Q$
2. 전체 한계편익과 한계비용을 같게 둔다.
$420-3Q=240$
따라서 효율적 공급량은 $Q=60$이다.
3. $Q=60$을 각 그룹의 개별수요에 대입한다.
$P_1=30-\frac{1}{6}(60)=20$
$P_2=60-\frac{1}{2}(60)=30$
검산하면 $6\times20+4\times30=240=MC$이므로 각 개인의 부담은 그룹 1이 20, 그룹 2가 30이다.

선지 판단

① X — $P_1=5, P_2=10$은 효율적 공급량 $Q=60$에서의 개인별 한계편익이 아니다. 올바르게는 $P_1=20$, $P_2=30$이다.
② X — $P_1=10, P_2=20$은 두 그룹의 부담 합계가 $6\times10+4\times20=140$에 불과하여 $MC=240$을 충당하지 못한다. 올바르게는 $P_1=20, P_2=30$이다.
③ X — $P_1=15, P_2=20$은 효율적 공급량에서의 수요가격과 일치하지 않는다. 또한 $P_1=15$는 그룹 1의 수요식에서 $Q=90$을, $P_2=20$은 그룹 2의 수요식에서 $Q=80$을 뜻하므로 동일한 공공재 수량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 올바르게는 $P_1=20, P_2=30$이다.
④ O — $Q=60$에서 $P_1=20, P_2=30$이고, 전체 부담도 $6\times20+4\times30=240$으로 한계비용과 같다.
⑤ X — $P_1=20$은 $Q=60$에서 맞지만 $P_2=40$은 $Q=40$에 해당하므로 같은 공공재 수량에서의 부담 조합이 아니다. $P_2=40$을 $P_2=30$으로 고쳐야 한다.

오답 포인트

공공재 수요는 개인별 수요량을 수평 합산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수량에서 개인별 지불의사를 수직 합산한다. 또한 평균비용이 일정하면 한계비용도 240이며, 그룹별 가격을 합산할 때는 반드시 각 그룹의 인원수 6명과 4명을 곱해야 한다. ⑤처럼 각 가격이 서로 다른 공공재 수량을 가리키는 조합도 배제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공공재의 효율적 공급과 개인별 부담을 묻는 문제는 개인수요에 각 그룹의 인원수를 곱해 수직 합산하고, 그 합을 한계비용과 같게 두어 Q를 구한 뒤, 같은 Q를 각 개인수요에 다시 대입하는 순서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공공재는 수직 합산, 효율 조건은 $\sum MB=MC$, 개인별 린달 부담가격의 합은 한계비용이다.

NoteBase

문 27. 어떤 사회에서 선택 대안에 대한 각 구성원의 선호는 완비적(complete)이고 이행적(transitive)이며, 강선호(strict preference)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 사회에서 투표로 사회적 선택을 하는 경우, 투표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꽁도세(Condorcet) 승자는 항상 존재한다.
ㄴ. 과반수투표제 승자가 존재하면, 꽁도세 승자와 반드시 일치한다.
ㄷ. 최다득표제 승자가 존재하면, 꽁도세 승자와 반드시 일치한다.
ㄹ. 꽁도세 승자가 존재한다면, 항상 유일하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ㄴ, ㄷ, ㄹ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콩도르세 승자, 과반수투표제 승자, 최다득표제 승자의 관계와 다수결의 순환 가능성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콩도르세 승자는 다른 모든 대안과 일대일로 비교했을 때 각각 과반수의 지지를 얻어 이기는 대안이다. 개인의 선호가 완비적이고 이행적이어도 사회 전체의 다수결 선호는 순환할 수 있으므로 콩도르세 승자가 항상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과반수투표제 승자는 전체 유권자의 과반수가 가장 선호하는 대안이므로 다른 어떤 대안과 일대일로 비교해도 그 과반수의 지지를 유지하여 콩도르세 승자가 된다. 반면 최다득표제는 1순위 표를 가장 많이 받은 대안을 고를 뿐 과반수 득표나 모든 일대일 대결의 승리를 보장하지 않는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ㄱ이 틀렸다. 개인별 선호가 완비적·이행적이어도 다수결에 따른 사회적 선호에는 순환이 생길 수 있으므로 콩도르세 승자가 존재하지 않을 수 있다. 올바른 조합은 ㄴ, ㄹ이다.
② X — ㄱ과 ㄷ이 모두 틀렸다. 콩도르세 승자는 항상 존재하지 않으며, 최다득표제 승자는 단순히 1순위 표가 가장 많을 뿐 모든 대안과의 일대일 대결에서 이긴다는 보장이 없다. 올바른 조합은 ㄴ, ㄹ이다.
③ X — ㄴ은 옳지만 ㄷ이 틀렸다. 과반수투표제 승자는 콩도르세 승자와 일치하지만, 최다득표제 승자는 콩도르세 승자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올바른 조합은 ㄴ, ㄹ이다.
④ O — ㄴ과 ㄹ이 모두 옳다. 과반수투표제 승자는 다른 모든 대안과의 일대일 대결에서도 과반수 지지를 받아 콩도르세 승자가 되며, 강선호 아래에서는 서로 다른 두 대안이 동시에 상대방을 이길 수 없으므로 콩도르세 승자가 존재하면 유일하다.
⑤ X — ㄴ과 ㄹ은 옳지만 ㄷ이 틀렸다. '최다득표제 승자와 콩도르세 승자가 반드시 일치한다'는 표현을 '최다득표제 승자는 콩도르세 승자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로 고쳐야 한다. 올바른 조합은 ㄴ, ㄹ이다.

오답 포인트

핵심 함정은 개인 선호의 이행성을 사회적 다수결 선호의 이행성으로 착각하는 것과 '최다 득표'를 '과반수 득표'로 오해하는 것이다. 특히 ㄷ의 '반드시 일치한다'는 표현은 최다득표제가 일대일 비교 결과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틀린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다수결 순환 가능성을 확인하여 콩도르세 승자의 존재가 보장되는지 판단한다. 그다음 과반수 득표 대안은 모든 상대와의 일대일 대결에서도 이기지만, 단순 최다득표 대안은 그렇지 않을 수 있음을 구분한다. 마지막으로 강선호에서는 콩도르세 승자 두 명이 서로를 동시에 이길 수 없으므로 존재한다면 유일하다고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콩도르세 승자는 항상 존재하지 않지만 존재하면 유일하다. 과반수 승자는 콩도르세 승자이고, 최다득표 승자는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NoteBase

문 28. 10명의 투표자 중 A 유형은 3명, B 유형은 3명, C 유형은 4명이며, 이들은 네 개의 대안 a, b, c, d를 놓고 선택하고자 한다. 각 유형의 대안에 대한 선호는 다음과 같다고 하자. 꽁도세(Condorcet) 방식과 보다(Borda) 투표제로 승자를 각각 결정할 때, 그 결과로 옳은 것은? (단, 선호 조작은 없다고 가정한다.)

◯ A 유형[3명]: a > b > c > d
◯ B 유형[3명]: a > b > d > c
◯ C 유형[4명]: b > c > d > a

① 꽁도세 승자와 보다 승자는 모두 a이다.
② 꽁도세 승자와 보다 승자는 모두 b이다.
③ 꽁도세 승자는 a, 보다 승자는 b이다.
④ 꽁도세 승자는 b, 보다 승자는 a이다.
⑤ 꽁도세 승자는 존재하지 않지만, 보다 승자는 a이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꽁도세 방식에서는 각 대안을 일대일로 비교하고, 보다 방식에서는 선호 순위별 점수를 합산하여 두 방식의 승자를 구분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A 유형 3명: a > b > c > d
B 유형 3명: a > b > d > c
C 유형 4명: b > c > d > a
꽁도세 승자는 다른 모든 대안과의 일대일 다수결에서 이기는 대안이다. 보다 점수는 네 대안의 순위에 1위 3점, 2위 2점, 3위 1점, 4위 0점을 부여하여 계산한다.

사용할 공식

꽁도세 방식: 각 대안 쌍에서 더 많은 투표자가 선호하는 대안을 확인한다.
보다 방식: 대안별 총점은 Σ(해당 순위의 점수 × 그 유형의 인원)이다.
꽁도세 방식은 대안 간 일대일 다수 우위를, 보다 방식은 전체 선호 순위의 강도를 반영하므로 두 승자가 달라질 수 있다.

NoteBase

계산 과정

1. a와 b를 비교하면 A·B 유형 6명은 a를, C 유형 4명은 b를 선호하므로 a가 6 대 4로 이긴다.
2. a와 c를 비교해도 A·B 유형 6명은 a를, C 유형 4명은 c를 선호하므로 a가 6 대 4로 이긴다. a와 d의 비교에서도 같은 이유로 a가 6 대 4로 이긴다. 따라서 꽁도세 승자는 a이다.
3. 보다 점수는 a가 $3 \times 3 + 3 \times 3 + 0 \times 4 = 18$점, b가 $2 \times 3 + 2 \times 3 + 3 \times 4 = 24$점이다.
4. c는 $1 \times 3 + 0 \times 3 + 2 \times 4 = 11$점, d는 $0 \times 3 + 1 \times 3 + 1 \times 4 = 7$점이다. 최고점은 b의 24점이므로 보다 승자는 b이다.

선지 판단

① X — 꽁도세 승자는 a이지만 보다 승자는 a가 아니라 b이다. 올바르게는 '꽁도세 승자는 a, 보다 승자는 b이다'이다.
② X — 보다 승자는 b이지만 꽁도세 승자는 b가 아니라 a이다. 올바르게는 '꽁도세 승자는 a, 보다 승자는 b이다'이다.
③ O — a는 다른 모든 대안을 일대일로 이기고, b는 보다 점수 24점으로 가장 높다. 따라서 꽁도세 승자는 a, 보다 승자는 b이다.
④ X — 두 승자를 서로 바꾼 표현이다. 올바르게는 '꽁도세 승자는 a, 보다 승자는 b이다'이다.
⑤ X — a가 b, c, d를 각각 6 대 4로 이기므로 꽁도세 승자는 존재하며 a이다. 또한 보다 승자는 a가 아니라 b이다. 올바르게는 '꽁도세 승자는 a, 보다 승자는 b이다'이다.

오답 포인트

꽁도세 방식에서 1순위 표만 세거나, 보다 방식에서 1순위 표만 비교하면 두 방식을 혼동하게 된다. 특히 b는 10명 모두에게 1위 또는 2위이므로 보다 점수가 높지만, a와 b의 일대일 비교에서는 A·B 유형 6명이 a를 선호하므로 a가 이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꽁도세 승자는 후보 하나를 정해 나머지 모든 후보와 일대일 대결을 시키고, 보다 승자는 순위별 점수를 대안별로 모두 합산하여 판단한다. 두 계산 결과를 각각 확정한 뒤 선지와 대응한다.

암기 포인트

꽁도세는 '모든 상대와 맞대결', 보다는 '모든 순위에 점수'이다.

NoteBase

문 29. 외부효과가 발생한 경우, 코즈(Coase) 정리의 적용과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재산권을 피해자가 가지든 가해자가 가지든 자발적 협상으로 효율적인 자원배분에 도달할 수 있다.

② 정부의 개입 없이 외부성을 해결하는 사적 해결 방안의 하나이다.

③ 거래비용이 존재하면 외부효과를 교정하기 위한 정부의 개입이 정당화될 수 있다.

④ 피해 규모에 대한 정보비대칭은 거래비용의 한 요소로 볼 수 있다.

⑤ 코즈정리는 현실에서 항상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정답 5번

출제 포인트

코즈 정리가 성립하는 조건과 그 현실적 한계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코즈 정리는 재산권이 명확하고 거래비용이 없거나 충분히 작으면 외부효과의 당사자들이 자발적으로 협상하여 효율적인 자원배분에 도달할 수 있다는 이론이다. 재산권의 최초 귀속은 효율적인 자원배분에는 영향을 주지 않지만, 협상 후의 소득분배에는 영향을 줄 수 있다. 현실에서는 정보 부족, 협상·감시·계약 집행 비용, 많은 당사자 수 등이 거래비용을 높여 협상을 어렵게 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거래비용이 없고 재산권이 명확하다는 조건에서는 피해자와 가해자 중 누구에게 재산권이 처음 주어져도 자발적 협상을 통해 효율적인 자원배분에 도달할 수 있다. 다만 최초의 재산권 배분에 따라 당사자 사이의 소득분배는 달라질 수 있다.

② O. 코즈식 협상은 외부효과의 당사자들이 재산권을 바탕으로 직접 협상하는 사적 해결 방식이므로 정부의 조세·보조금 같은 직접 개입 없이도 외부성을 내부화할 수 있다.

③ O. 거래비용이 크면 상호 이익이 되는 협상도 성립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부 개입이 정당화될 여지가 있다. 다만 거래비용의 존재만으로 정부 개입이 언제나 더 효율적이라는 뜻은 아니며, 정부 개입의 비용과 편익도 비교해야 한다.

④ O. 피해 규모를 정확히 알기 어렵거나 당사자 사이에 정보가 비대칭적으로 분포하면 정보를 탐색·검증하고 합의하는 비용이 커진다. 따라서 피해 규모에 관한 정보비대칭은 넓은 의미의 거래비용을 발생시키는 요소로 볼 수 있다.

⑤ X. 틀린 표현은 '현실에서 항상 적용할 수 있다'이다. 실제로는 거래비용이 충분히 작고 재산권이 명확하며 협상이 가능해야 코즈 정리가 원활하게 적용된다. 당사자가 많거나 정보비대칭과 협상 비용이 크면 적용이 제한된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①의 '재산권을 누가 가지든'은 코즈 정리의 무조건적 결론이 아니라 거래비용이 없거나 충분히 작다는 전제 아래 효율성에 관한 결론이다. 이를 현실의 모든 상황에 그대로 확장한 ⑤의 '항상'이 결정적인 오류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코즈 정리 선지는 먼저 재산권의 명확성, 낮은 거래비용, 자발적 협상 가능성이라는 전제를 확인한다. 그다음 효율성과 분배를 구분하고, '항상 적용된다'처럼 현실의 거래비용을 무시한 단정이 있는지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코즈 정리의 핵심은 '재산권 명확 + 거래비용 미미 → 자발적 협상으로 효율성 달성'이며, 최초 권리 배분은 효율성보다 분배에 영향을 준다.

NoteBase

문 30. 어떤 공장이 생산 활동을 하면서 오염 물질을 배출한다. 이로 인한 피해자의 한계피해는 $MD = \frac{1}{2}Q$이며 피해자는 별도의 편익을 얻지 않는다. 공장의 한계편익은 $MB = 120 - Q$이며, 한계비용은 $MC = 0$이다. 당사자 간 협상은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으며 거래비용은 0이다. 오염배출권리가 공장에 있을 경우, 사회적으로 효율적인 생산량에 도달하도록 협상이 타결되기 위해 피해자가 공장에 제공해야 하는 최소 금액은 얼마인가? (단, Q는 생산량이다.)

① 0

② 800

③ 1,200

④ 1,600

⑤ 2,000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오염배출권리가 공장에 있을 때 사회적 효율 생산량까지 감산하도록 만들기 위한 최소 보상액을 구하는 문제이다. 최소 보상액은 감산으로 공장이 포기하는 편익이다.

조건 정리

공장의 한계편익은 $MB = 120 - Q$, 한계비용은 $MC = 0$, 피해자의 한계피해는 $MD = \frac{1}{2}Q$이다. 공장이 오염배출권리를 가지므로 협상 전에는 사적 순편익을 극대화하는 $MB = MC$에서 생산한다. 거래비용이 0이므로 협상을 통해 사회적 효율 생산량에 도달할 수 있다.

사용할 공식

사회적 효율 조건은 $MB = MC + MD$이다. 공장이 효율 생산량까지 감산할 때 요구하는 최소 보상액은 포기한 생산구간의 순한계편익이므로 다음과 같다.
최소 보상액= ∫ _Q^*^Q_0(MB-MC) dQ
이는 공장의 재산권을 인정한 상태에서 감산 때문에 감소하는 공장 이윤을 보전해야 하기 때문이다.

계산 과정

1. 협상 전 생산량은 $120 - Q = 0$에서 $Q_0 = 120$이다.
2. 사회적 효율 생산량은 $120 - Q = \frac{1}{2}Q$에서 $Q^* = 80$이다.
3. 공장이 120에서 80으로 감산하면서 포기하는 편익을 계산한다.

$\int_{80}^{120}(120 - Q)dQ = \frac{1}{2} \times (120 - 80) \times 40 = 800$

따라서 피해자가 제공해야 하는 최소 금액은 800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0은 공장의 감산 손실을 보상하지 못한다. 오염배출권리가 공장에 있으므로 무상 감산이 아니라 포기한 편익 800을 최소한 지급해야 한다. 틀린 값 0 → 올바른 최소 금액은 800이다.
② O — $Q=120$에서 $Q=80$까지 공장이 포기하는 편익의 면적은 밑변과 높이가 각각 40인 삼각형의 넓이 800이다.
③ X — 1,200은 감산구간 80≤ Q≤120에서 공장이 포기하는 순편익과 일치하지 않는다. 해당 적분값은 800이다. 틀린 값 1,200 → 올바른 최소 금액은 800이다.
④ X — 1,600은 효율 생산량 $Q=80$에서 발생하는 총피해 $\int_0^{80}\frac{1}{2}QdQ=1,600$이며 공장의 감산 손실이 아니다. 틀린 값 1,600 → 올바른 최소 금액은 800이다.
⑤ X — 2,000은 감산으로 피해자가 줄일 수 있는 총피해 $\int_{80}^{120}\frac{1}{2}QdQ=2,000$, 즉 피해자의 최대 지불의사액이다. 최소 지급액은 공장의 감산 손실인 800이다. 틀린 값 2,000 → 올바른 최소 금액은 800이다.

오답 포인트

공장의 최소 수용액 800과 피해자의 최대 지불의사액 2,000을 혼동하기 쉽다. 협상 가능 범위는 800 이상 2,000 이하이지만, 문제는 피해자가 제공해야 하는 '최소 금액'을 물으므로 공장이 포기하는 편익 800을 선택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MB=MC+MD$로 효율 생산량을 구한 뒤 재산권 보유자를 확인한다. 생산자가 오염배출권리를 가지면 생산 감축으로 잃는 $MB-MC$의 면적이 생산자의 최소 수용액이고, 줄어드는 피해의 면적이 피해자의 최대 지불의사액이다.

암기 포인트

공장 권리일 때 최소 보상은 공장의 감산 손실, 최대 보상은 피해자의 피해 감소분이다.

NoteBase

문 31. 사회 A와 B는 각각 2개의 소득계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A에서는 구성원 50%의 소득이 각각 100, 나머지가 각각 400이며, B에서는 구성원 50%의 소득이 각각 100, 나머지가 각각 300일 때, 소득불평등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동일한 소득계층 내에서 각 개인의 소득은 동일하며, 두 사회의 소득 불평등도는 로렌츠곡선으로 나타낼 수 있다.)

① 공리주의 사회후생함수를 적용하면, A와 B의 앳킨슨지수는 같다.

② 롤스의 사회후생함수를 적용하면, 앳킨슨지수는 A가 더 크다.

③ 롤스의 사회후생함수를 적용하면, A와 B의 균등분배대등소득은 같다.

④ A와 B의 로렌츠곡선은 서로 교차하여, 불평등도의 비교가 어렵다.

⑤ 로렌츠곡선에서 계산한 지니계수는 B가 더 작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사회후생함수에 따른 균등분배대등소득과 앳킨슨지수를 계산하고, 로렌츠곡선의 지배관계와 지니계수를 비교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두 사회 모두 하위 50%의 소득은 100이다. 상위 50%의 소득은 A에서 400, B에서 300이므로 평균소득은 각각 $\mu_A = 250, \mu_B = 200$이다. 공리주의 사회후생함수에서는 균등분배대등소득이 평균소득과 같고, 롤스 사회후생함수에서는 최저소득과 같다.

사용할 공식

앳킨슨지수는 $A = 1 - y_{EDE}/\mu$이다. 여기서 y_{EDE}는 균등분배대등소득, μ는 평균소득이다. 지니계수는 $G = E|X_i - X_j|/(2\mu)$로 계산할 수 있다. 이 공식들은 각각 현재의 사회후생과 동일한 후생을 주는 균등소득이 평균소득에서 얼마나 낮은지, 개인 간 소득격차가 평균소득에 비해 얼마나 큰지를 측정한다.

계산 과정

1. 공리주의에서는 $y_{EDE} = \mu$이므로 두 사회의 앳킨슨지수는 모두 0이다.
2. 롤스 기준에서는 두 사회 모두 $y_{EDE} = 100$이다. 따라서 $A_A = 1 - 100/250 = 0.6$, $A_B = 1 - 100/200 = 0.5$이다.
3. 하위 50%의 누적소득점유율은 A가 $0.5 \times 100/250 = 0.2$, B가 $0.5 \times 100/200 = 0.25$이다. 따라서 B의 로렌츠곡선이 A의 로렌츠곡선보다 위에 있어 두 곡선은 교차하지 않는다.
4. 소득이 다른 두 사람을 뽑을 확률은 1/2이므로 $G_A = (300/2)/(2 \times 250) = 0.3$, $G_B = (200/2)/(2 \times 200) = 0.25$이다.

NoteBase

선지 판단

① O. 공리주의에서는 균등분배대등소득이 평균소득과 같으므로 A와 B의 앳킨슨지수는 모두 0이다.
② O. 롤스 기준 앳킨슨지수는 A가 0.6, B가 0.5이므로 A가 더 크다.
③ O. 롤스 사회후생은 최저소득에 의해 결정되며, 두 사회의 최저소득이 모두 100이므로 균등분배대등소득도 모두 100이다.
④ X. 하위 50%의 누적소득점유율은 A가 0.2, B가 0.25이므로 B의 로렌츠곡선이 A의 로렌츠곡선을 지배한다. '서로 교차하여 비교가 어렵다'가 틀린 표현이며, 올바르게는 '두 곡선은 교차하지 않고 B가 A보다 소득분배가 더 평등하다'이다.
⑤ O. 지니계수는 A가 0.3, B가 0.25이므로 B가 더 작다.

오답 포인트

두 사회의 평균소득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로렌츠곡선이 교차한다고 판단하면 안 된다. 로렌츠곡선은 소득의 절대액이 아니라 누적소득점유율을 비교한다. 이 문항에서는 하위 50%의 점유율이 B에서 더 크므로 B의 곡선이 A의 곡선 위에 놓인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각 사회의 평균소득을 구하고, 사회후생함수에 따라 균등분배대등소득을 정한 뒤 앳킨슨지수를 계산한다. 로렌츠곡선은 각 인구 누적비율에서 누적소득점유율을 비교하고, 곡선이 한쪽에서 계속 위에 있으면 교차가 아니라 로렌츠 지배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공리주의는 $y_{EDE} = \mu$, 롤스는 $y_{EDE} = y_{min}$이다. 로렌츠곡선은 절대소득이 아니라 누적소득점유율로 비교한다.

NoteBase

문 32. 소득분배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노직(R.Nozick)은 결과의 정의보다 절차상의 정의를 중요시했다.

② 공리주의에 의하면, 사회후생을 극대화할 수 있다면 매우 불균등한 분배 상태가 정당화될 수도 있다.

③ 롤즈(J.Rawls)의 최소극대화 원칙에 의하면, 사회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의 후생을 극대화해야 한다.

④ 러너(A.Lerner)는 동등확률 가정을 통해 사람들의 효용함수가 모두 같고, 소득에 대한 한계효용이 체감할 경우에만 균등분배가 정당화된다고 보았다.

⑤ 에지워스(F.Edgeworth)의 최적분배이론은 공리주의 사회후생을 가정했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소득분배의 정의를 설명하는 노직·공리주의·롤즈·러너·에지워스의 핵심 주장을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정리

노직: 권리부여이론 — 분배 결과의 특정한 모양보다 정당한 취득·이전·교정의 절차를 중시한다.
공리주의: 총효용 극대화 — 분배의 평등 그 자체보다 개인 효용의 합인 사회후생을 크게 하는지를 중시한다.
롤즈: 최소극대화 원칙 — 가장 불리한 사람의 몫이나 후생을 가능한 한 크게 하는 분배를 선택한다.
러너: 동등확률 가정 — 효용함수와 개인의 대응을 모를 때 각 대응을 동일한 확률로 보아 기대 총효용을 극대화하면 균등분배가 도출된다.
에지워스: 공리주의적 최적분배 — 개인 효용의 합을 극대화하는 분배를 탐구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 노직은 정당한 취득과 자발적 이전 등 분배가 이루어진 역사적 절차를 중시하며, 최종 분배 결과가 특정한 평등 형태인지 자체를 정의의 기준으로 삼지 않는다.
② O — 공리주의는 개인 효용의 합을 극대화하는 분배를 정당화하므로, 총효용이 더 커진다면 결과가 매우 불균등하더라도 허용될 수 있다.
③ O — 롤즈의 최소극대화 원칙은 가능한 분배안 중 가장 불리한 사람의 후생이 가장 큰 안을 선택한다는 원칙이다.
④ X — 틀린 표현은 '사람들의 효용함수가 모두 같고 … 경우에만'이다. 러너의 동등확률 가정은 모든 사람의 효용함수가 같다는 가정이 아니라, 서로 다른 효용함수 중 어느 것이 누구에게 속하는지 알 수 없어 각 대응을 동일한 확률로 취급한다는 가정이다. 각 효용함수에서 소득의 한계효용이 체감한다면 이러한 무지와 동등확률 아래 기대 총효용을 극대화하는 균등분배가 정당화된다.
⑤ O — 에지워스의 최적분배이론은 개인 효용의 합을 사회후생으로 보는 공리주의적 사회후생을 전제로 최적 소득분배를 설명한다.

NoteBase

출제자가 노린 함정

균등분배를 도출하는 전통적 공리주의 설명의 '동일한 효용함수' 가정을 러너의 동등확률 가정과 혼동하게 한 것이 함정이다. ④의 '동등확률'은 효용함수가 모두 같다는 뜻이 아니라, 효용함수와 개인의 대응 가능성을 똑같은 확률로 본다는 뜻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학자명과 판단 기준을 연결한다. 노직은 절차, 공리주의와 에지워스는 총효용, 롤즈는 최하위자의 후생, 러너는 효용함수와 개인의 대응에 관한 무지와 동등확률로 구분한다.

암기 포인트

노직=절차, 롤즈=최하위, 러너=누가 어떤 효용함수인지 모르는 동등확률, 에지워스=공리주의적 총효용이다.

NoteBase

문 33. 소득분배 상태를 나타내는 불평등도지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지니계수는 로렌츠곡선에서 구할 수 있으나, 두 사회의 로렌츠곡선이 교차하면 지니계수를 통해 불평등도를 비교할 수 없다.

② 달튼지수와 5분위배율은 클수록 균등한 분배를 의미한다.

③ 소득분배가 완전히 균등하다면 지니계수는 0, 십분위분배율은 1이 된다.

④ 달튼지수는 롤스의 사회후생함수를 가정한 것이다.

⑤ 앳킨슨지수는 불평등성에 대한 명백한 가치판단을 전제로 하나, 로렌츠곡선은 곡선의 상대적 위치로 불평등도를 평가하는 서수적 평가방법이다.

정답 5번

출제 포인트

로렌츠곡선과 지니계수·십분위분배율·5분위배율·달튼지수·앳킨슨지수의 의미, 지수의 증감 방향, 가치판단의 포함 여부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로렌츠곡선은 누적 인구비율과 누적 소득점유율의 관계를 나타내며, 두 곡선이 교차하지 않을 때 상대적 위치로 분배 상태를 서수적으로 비교한다.
지니계수는 로렌츠곡선과 완전균등선 사이 면적을 수치화한 지수로, 0이면 완전균등이고 값이 클수록 불평등하다.
5분위배율은 상위 20%의 소득을 하위 20%의 소득으로 나눈 값이므로 클수록 불평등하다. 십분위분배율은 하위 40%의 소득점유율을 상위 20%의 소득점유율로 나눈 값이므로 클수록 균등하며, 완전균등이면 2이다.
달튼지수와 앳킨슨지수는 사회후생에 관한 가치판단을 반영한다. 달튼지수는 공리주의적 사회후생을 기초로 하고, 앳킨슨지수는 불평등회피도를 명시적으로 반영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두 사회의 로렌츠곡선이 교차하면 로렌츠우위만으로는 어느 사회가 더 균등한지 판단할 수 없지만, 각 곡선의 면적으로 지니계수를 계산하여 수치상 비교하는 것은 가능하다. 틀린 표현은 '지니계수를 통해 불평등도를 비교할 수 없다'이며, 올바르게는 '로렌츠곡선의 상대적 위치만으로는 불평등도를 서수적으로 비교할 수 없다'이다.
② X. 달튼지수는 값이 클수록 후생손실과 불평등이 크고, 5분위배율도 상위 20%와 하위 20%의 격차가 커질수록 증가한다. 틀린 표현은 '클수록 균등'이며, 올바르게는 두 지수 모두 작을수록 균등한 분배를 의미한다.
③ X. 완전균등분배에서는 지니계수가 0인 것은 맞지만, 십분위분배율은 1이 아니라 2이다. 모든 사람의 소득이 같으면 하위 40%의 소득점유율은 40%, 상위 20%의 소득점유율은 20%이므로 40%를 20%로 나눈 값은 2이다. 틀린 표현 '십분위분배율은 1'은 '십분위분배율은 2'로 고쳐야 한다.
④ X. 달튼지수는 개인 효용의 합을 사회후생으로 보는 공리주의적 사회후생함수를 전제로 한다. 틀린 표현은 '롤스의 사회후생함수'이며, 올바르게는 '공리주의적 사회후생함수'이다. 롤스의 사회후생함수는 가장 낮은 효용을 중시하는 최소극대화 기준이다.
⑤ O. 앳킨슨지수는 불평등회피도라는 가치판단을 명시적으로 포함한다. 반면 로렌츠곡선은 한 곡선이 다른 곡선의 아래에 놓이는지를 이용해 순위를 판단하는 서수적 방법이므로, 불평등 정도의 수치적 차이까지 나타내지는 않는다.

오답 포인트

①은 '로렌츠곡선이 교차하면 로렌츠우위 판정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지니계수의 수치 비교도 불가능하다'로 바꾼 함정이다. ③은 지니계수의 완전균등 값 0과 십분위분배율의 완전균등 값 2를 함께 기억하는지를 묻고, ④는 공리주의적 후생함수와 롤스의 최소극대화 후생함수를 바꾸어 제시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지수의 분자와 분모를 확인해 값의 증가가 균등을 뜻하는지 불평등을 뜻하는지 판단한다. 그다음 완전균등 상태의 값을 직접 대입하고, 사회후생지수는 어떤 가치판단을 전제로 하는지 구별한다. 로렌츠곡선이 교차하는 경우에는 로렌츠우위 판정과 지니계수의 수치 비교를 별개의 문제로 본다.

암기 포인트

완전균등은 지니계수 0, 십분위분배율 2이다. 5분위배율은 클수록 불평등하고, 달튼은 공리주의, 앳킨슨은 불평등회피도이다.

NoteBase

문 34. 근로장려세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근로소득이 증가할수록 근로장려금이 커지는 점증구간에서의 대체효과와 소득효과는 모두 노동공급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② 우리나라는 가구 구성원에 따라 지원 혜택을 달리 운영하고 있다.

③ 근로소득이 증가할수록 근로장려금이 감소하는 점감구간에서는 소득 1원 증가에 의한 가처분소득 증가분이 줄어든다.

④ 부(-)의 소득세보다 저소득층의 근로의욕을 촉진하는 효과가 크다.

⑤ 암묵적 한계세율이 영(0)인 구간에서는 대체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근로장려세제의 점증구간·평탄구간·점감구간에서 예산선의 기울기와 가처분소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에 따른 대체효과와 소득효과의 방향이 무엇인지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근로장려세제는 일정 소득 이하의 근로가구에 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유도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이다.
점증구간에서는 근로소득이 늘수록 장려금도 늘어 실질임금이 상승한다. 이에 따라 여가의 기회비용이 커지는 대체효과는 노동공급을 늘리지만, 장려금으로 실질소득이 증가하는 소득효과는 여가가 정상재라면 노동공급을 줄인다.
평탄구간에서는 장려금이 일정하므로 암묵적 한계세율이 0이고 실질임금이 변하지 않아 대체효과가 없으며, 소득효과만 노동공급을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점감구간에서는 근로소득 증가에 따라 장려금이 감소하므로 암묵적 한계세율이 양(+)이 되고, 근로소득 1원 증가에 따른 가처분소득 증가분은 1원보다 작아진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틀린 표현은 '대체효과와 소득효과는 모두 노동공급을 증가시키는 방향'이다. 점증구간에서 대체효과는 노동공급을 증가시키지만, 소득효과는 실질소득 증가로 여가 수요를 늘려 노동공급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② O — 우리나라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지급액을 산정하며, 단독가구·홑벌이가구·맞벌이가구별로 총소득 기준과 최대 지급액을 달리한다.
③ O — 점감구간에서는 추가 근로소득의 일부만큼 장려금이 줄어든다. 따라서 근로소득 1원이 늘어도 가처분소득은 1원보다 적게 증가한다.
④ O — 부(-)의 소득세는 근로하지 않아도 급여를 받을 수 있어 노동시장 진입 유인이 상대적으로 약하다. 근로장려세제는 근로소득이 있어야 지원되고 점증구간에서 추가 근로에 보조금을 주므로 저소득층의 근로 유인이 더 크다.
⑤ O — 암묵적 한계세율이 0이면 추가 소득에 따른 장려금 감소가 없어 실질임금과 여가의 상대가격이 변하지 않는다. 따라서 대체효과는 발생하지 않고 장려금에 따른 소득효과만 발생한다.

오답 포인트

①은 점증구간에서 장려금이 증가한다는 사실만 보고 두 효과가 모두 노동공급을 늘린다고 착각하게 만든다. 실질임금 상승은 대체효과를 통해 노동공급을 늘리지만, 실질소득 상승은 소득효과를 통해 노동공급을 줄인다는 점이 핵심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장려금의 기울기를 확인한다. 장려금이 증가하면 대체효과는 노동공급 증가, 소득효과는 노동공급 감소 방향이다. 장려금이 일정하면 대체효과는 없고 소득효과만 있으며, 장려금이 감소하면 암묵적 한계세율이 양(+)이 되어 추가 근로소득에 따른 가처분소득 증가분이 작아진다.

암기 포인트

점증은 대체효과 증가·소득효과 감소, 평탄은 소득효과만, 점감은 양(+)의 암묵적 한계세율이다.

NoteBase

문 35. 부의 소득세(negative income tax)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재원이 고정된 상황에서 기초수당을 올리면 한계세율도 올려야 한다.

②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기초수당이 클수록 재분배효과가 커진다.

③ 대체효과는 노동공급의 증가, 소득효과는 노동공급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④ 면세점(과세최저소득 수준) 이하 소득 계층의 근로의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⑤ 행정적으로 단순하며, 별도의 수혜 자격 심사가 필요 없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부의 소득세에서 기초수당과 한계세율의 관계, 소득재분배 효과, 노동공급 효과 및 행정상 특징을 판단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부의 소득세는 일정 소득 이하의 사람에게 세금을 걷는 대신 급여를 지급하고, 소득이 늘어날수록 그 급여를 일정 비율로 줄이는 제도이다. 소득이 Y, 무소득자에게 지급하는 기초수당이 G, 급여감소율인 한계세율이 t이면 순급여는 $G - tY$이고 면세점은 G/t이다. 한계세율은 근로로 얻는 추가소득 중 급여 감소로 회수되는 비율이므로, 높을수록 근로의 순보상이 작아진다.

선지별 해설

① O — 재원이 고정되어 있을 때 기초수당을 높이면 필요한 지출이 증가한다. 재원 제약을 맞추려면 소득 증가에 따른 급여감소율, 즉 한계세율을 높여 급여를 더 빠르게 줄여야 한다.
② O — 다른 조건이 같다면 기초수당이 클수록 저소득층에 이전되는 소득이 커지므로 소득재분배 효과도 커진다.
③ X — 틀린 표현은 '대체효과는 노동공급의 증가'이다. 한계세율 때문에 근로의 순임금이 낮아지므로 대체효과는 여가를 늘리고 노동공급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이전소득이 늘어나는 소득효과도 정상재인 여가의 수요를 늘려 노동공급을 감소시킨다. 따라서 두 효과 모두 노동공급 감소 방향이다.
④ O — 면세점 이하에서는 소득이 늘 때 급여가 줄어 실질적인 한계세율이 적용된다. 대체효과와 소득효과가 모두 노동공급을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하므로 근로의욕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⑤ O — 세금 징수와 현금급여 지급을 하나의 소득세 체계에서 처리하고 신고된 소득에 따라 급여를 정하므로 행정이 비교적 단순하며 별도의 수혜 자격 심사가 필요하지 않다.

오답 포인트

③은 일반적인 임금 상승의 대체효과와 부의 소득세의 효과를 혼동하게 만든다. 부의 소득세의 한계세율은 근로의 순임금을 낮추므로 대체효과가 노동공급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줄인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순급여 $G - tY$와 면세점 G/t을 확인한다. 노동공급은 '한계세율이 순임금을 낮춘다 → 대체효과로 노동공급 감소', '이전소득이 늘어난다 → 소득효과로 노동공급 감소'의 순서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부의 소득세는 기초수당이 클수록 재분배는 커지고, 한계세율이 높을수록 근로유인은 약해진다. 면세점 이하에서는 대체효과와 소득효과가 모두 노동공급을 줄인다.

NoteBase

문 36. 우리나라의 소득재분배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노동 능력이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제도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라 한다.

② 근로장려세제는 일을 하고 있으나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을 돕는 제도이다.

③ 사회보험제도는 가입자들이 납부한 보험료를 기본 재원으로 운영되므로 재분배효과는 제한적이다.

④ 공공부조는 일반 국민이 납부한 세금을 재원으로 저소득계층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⑤ 공공부조는 기여 여부와 관계없이 대상자이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근로장려세제·사회보험·공공부조의 대상과 재원, 기여 여부를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제공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공공부조 제도이다. 수급 대상은 단순히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으로 한정되지 않는다.
근로장려세제: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이다.
사회보험: 가입자와 사용자 등이 부담하는 보험료를 주된 재원으로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는 제도이다.
공공부조: 조세를 재원으로 생활이 어려운 사람을 선별하여 지원하는 비기여 방식의 제도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 틀린 표현은 '노동 능력이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소득인정액 등 급여별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근로능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대상에서 일률적으로 제외하지 않는다. 근로능력이 있는 생계급여 수급자에게는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올바르게는 '생활이 어려워 급여별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제도'이다.
② O — 근로장려세제는 일하고 있으나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사업자 등의 가구에 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한다.
③ O — 사회보험은 가입자와 사용자 등이 낸 보험료를 기본 재원으로 하고 급여가 가입·기여와 연결되므로, 조세로 저소득층을 선별 지원하는 공공부조보다 소득재분배효과가 제한적이다.
④ O — 공공부조는 일반 조세를 재원으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계층을 선별하여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⑤ O — 공공부조는 사전 보험료 납부 같은 기여를 급여 요건으로 삼지 않으므로, 법정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대상자는 기여 여부와 관계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①의 '노동 능력이 없는 사람'은 공공부조의 대상을 지나치게 좁힌 표현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근로능력의 유무와 수급자격을 동일시하지 않으며,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 자활 참여 조건이 붙을 수 있다는 점을 구분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각 제도를 대상·재원·기여 여부의 세 축으로 판단한다. 사회보험은 보험료와 기여가 핵심이고, 공공부조는 조세·저소득층 선별·비기여가 핵심이며, 근로장려세제는 저소득 근로가구의 근로유인과 소득지원이 핵심이다.

암기 포인트

사회보험은 보험료·기여, 공공부조는 조세·선별·비기여, 근로장려세제는 근로연계 소득지원이다.
기초생활보장은 '근로무능력자만'의 제도가 아니다.

NoteBase

문 37. 공적연금제도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적립방식의 경우, 자산대체효과는 국민저축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② 부과방식의 경우, 자산대체효과는 정부저축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③ 적립방식의 경우, 상속효과는 민간저축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④ 부과방식의 경우, 은퇴효과는 민간저축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⑤ 적립방식의 경우, 세대 간 소득재분배 효과가 발생한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공적연금이 저축에 미치는 자산대체효과·은퇴효과·상속효과와 적립방식·부과방식의 차이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자산대체효과: 연금수급권을 노후자산으로 인식하여 자발적인 민간저축을 줄이는 효과이다.
은퇴효과: 공적연금이 조기 은퇴를 유도하고 은퇴기간을 늘려, 근로기간 중 더 많은 민간저축을 하게 하는 효과이다.
상속효과: 현 세대가 공적연금으로 얻는 이익이나 후세대의 부담을 상속으로 보전하려 하여 민간저축을 늘리는 효과이다.
적립방식은 보험료를 기금으로 적립해 장래 급여를 지급하므로 공적 부문의 저축이 형성된다. 부과방식은 같은 시기의 근로세대가 낸 보험료로 은퇴세대의 급여를 지급하므로 세대 간 소득재분배가 발생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틀린 표현은 '국민저축을 감소'이다. 완전적립방식에서는 자산대체효과로 민간저축이 감소하는 만큼 연금기금의 적립, 즉 정부저축이 증가하므로 국민저축은 변하지 않는다. 올바르게는 자산대체효과가 민간저축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한다고 해야 한다.
② X — 틀린 표현은 '정부저축을 증가'이다. 자산대체효과는 연금수급권이 개인의 자산을 대신하여 민간저축을 줄이는 효과이다. 특히 부과방식에서는 당기의 보험료가 당기의 연금급여로 이전되므로 기금 적립에 따른 정부저축 증가가 발생하지 않는다.
③ X — 틀린 표현은 '민간저축을 감소'이다. 상속효과는 후세대의 연금 부담을 상속으로 보전하려는 동기 때문에 민간저축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④ O — 부과방식의 공적연금은 은퇴를 앞당기거나 은퇴기간을 늘릴 수 있다. 이에 대비하여 근로기간 중 더 많은 자산을 축적하려는 은퇴효과가 나타나므로 민간저축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⑤ X — 틀린 표현은 '적립방식'이다. 적립방식은 각 세대가 낸 보험료를 적립하여 그 세대의 장래 급여 재원으로 사용한다. 근로세대의 보험료로 은퇴세대의 급여를 지급하여 세대 간 소득재분배가 발생하는 방식은 부과방식이다.

오답 포인트

①은 민간저축 감소를 곧바로 국민저축 감소로 바꾼 것이 함정이다. 적립방식에서는 민간저축 감소와 연금기금 적립에 따른 공적 저축 증가를 함께 보아야 한다. 또한 세대 간 재분배는 적립방식이 아니라 부과방식의 핵심 특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효과의 방향을 판별한다. 자산대체효과는 민간저축 감소, 은퇴효과와 상속효과는 민간저축 증가이다.
다음으로 재원 방식을 판별한다. 적립방식은 기금 적립과 공적 저축, 부과방식은 동시기 세대 간 이전과 연결된다.

암기 포인트

자산대체는 민간저축 감소, 은퇴·상속은 민간저축 증가, 세대 간 이전은 부과방식이다.

NoteBase

문 38. 예산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품목별예산제도는 비슷한 일을 하는 부서 사이의 중복을 차단할 수 있다.

② 성과주의예산제도는 사업의 투입요소(inputs)를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한다.

③ 영기준예산제도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④ 프로그램예산제도는 관리기능을 강조한 제도이다.

⑤ 조세지출예산제도는 조세지출의 남발을 억제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정답 5번

출제 포인트

품목별예산제도, 성과주의예산제도, 영기준예산제도, 프로그램예산제도, 조세지출예산제도가 각각 무엇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관리하는지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품목별예산제도는 지출 대상을 인건비·물건비 등의 품목별로 통제하는 제도이며, 핵심은 투입과 회계적 통제이다.
성과주의예산제도는 정부가 수행하는 업무와 성과를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제도이며, 업무량·단위원가 등 산출과 관리가 핵심이다.
영기준예산제도는 기존 사업도 원점에서 검토하여 의사결정단위별 사업을 평가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을 배분하는 제도이다.
프로그램예산제도는 목표와 프로그램을 연결하여 장기계획과 예산 배분을 통합하는 제도이며, 계획기능을 강조한다.
조세지출예산제도는 비과세·감면 등 조세지출의 규모와 내용을 예산 형식으로 공개·관리하는 제도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품목별예산제도는 지출 품목별 통제에는 유리하지만 사업의 목표나 부서 간 유사 업무를 중심으로 보지 않으므로 중복사업을 파악·차단하기 어렵다. 틀린 표현은 '부서 사이의 중복을 차단할 수 있다'이며, 올바르게는 '투입요소에 대한 회계적 통제에 유리하다'이다.
② X. 성과주의예산제도는 투입요소가 아니라 업무량, 산출, 성과를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한다. 틀린 표현은 '투입요소를 중심으로'이며, 올바르게는 '사업의 업무량과 성과를 중심으로'이다.
③ X. 영기준예산제도는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의사결정패키지를 작성·평가하므로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든다. 틀린 표현은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이며, 올바르게는 '사업의 전면적 검토로 예산 낭비를 줄일 수 있으나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이다.
④ X. 프로그램예산제도는 목표 설정과 대안 비교를 통해 장기계획과 예산을 연결하므로 관리기능보다 계획기능을 강조한다. 틀린 표현은 '관리기능'이며, 올바르게는 '계획기능'이다.
⑤ O. 조세지출예산제도는 조세감면에 따른 간접적인 재정지출을 공개하고 관리함으로써 조세지출의 무분별한 확대와 남발을 억제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오답 포인트

각 제도의 이름보다 강조 기능을 바꾸어 제시한 것이 함정이다. 특히 성과주의예산제도의 산출·관리와 프로그램예산제도의 계획을 뒤바꾸거나, 영기준예산제도의 철저한 검토를 시간·비용 절약으로 오해하기 쉽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선지에서 무엇을 기준으로 예산을 보는지 확인한다. 품목별예산은 투입·통제, 성과주의예산은 업무·산출·관리, 프로그램예산은 목표·계획, 영기준예산은 원점 재검토·우선순위, 조세지출예산은 비과세·감면의 공개·통제로 구별한다.

암기 포인트

품목은 통제, 성과는 관리, 프로그램은 계획, 영기준은 원점, 조세지출은 감면 통제이다.

NoteBase

문 39. 정부지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공지출 프로그램에 대한 조세부담의 과소평가로 인한 재정착각은 정부지출의 팽창을 초래한다.

② 배로(R.Barro)에 의하면, 정부지출이 일정하다면 재정적자를 조세로 조달하든 국채로 조달하든 총수요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③ 피콕-와이즈만(A.Peacock and J.Wiseman)에 의하면, 사회적 혼란기에 전위효과가 발생하면 정부지출이 더 높은 수준으로 증가한다.

④ 브라운-잭슨(C.Brown and P.Jackson)에 의하면, 중위투표자의 공공서비스에 대한 소득탄력성이 충분히 크면 정부지출의 상대적 비중이 점차 커진다.

⑤ 뷰캐넌(J.Buchanan)의 리바이어던가설(Leviathan hypothesis)에 의하면, 정부가 생산·공급하는 서비스의 생산비용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증가하여 정부지출이 늘어나게 된다.

정답 5번

출제 포인트

정부지출 팽창을 설명하는 재정착각, 리카도 대등정리, 전위효과, 중위투표자 모형, 리바이어던 가설의 핵심 주장과 학자를 올바르게 연결하는 문제이다.

핵심 정리

재정착각: 납세자가 공공서비스의 실제 조세가격을 낮게 인식하면 공공지출 수요와 정부지출이 과도하게 커질 수 있다.
배로: 정부지출이 일정할 때 합리적인 가계가 국채 발행에 따른 미래 조세를 예상하면 조세 조달과 국채 조달의 총수요 효과가 달라지지 않는다는 리카도 대등정리를 제시한다.
피콕-와이즈만: 전쟁 등 사회적 혼란으로 조세부담의 허용 수준이 높아지면 정부지출이 상향 이동하고 혼란 이후에도 높은 수준이 유지될 수 있다는 전위효과를 설명한다.
브라운-잭슨: 중위투표자의 공공서비스 수요와 그 소득탄력성 등을 통해 정부지출 비중의 변화를 설명한다.
뷰캐넌: 리바이어던 가설은 정부를 공익만 추구하는 존재가 아니라 조세수입과 예산을 극대화하려는 독점적 존재로 본다.
보몰: 공공부문의 낮은 생산성 증가로 상대적 생산비용이 상승하여 정부지출이 늘어나는 현상을 불균형 성장 모형으로 설명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조세부담을 실제보다 작게 느끼는 재정착각이 생기면 공공서비스의 조세가격을 과소평가하여 더 많은 공공지출을 요구하므로 정부지출이 팽창할 수 있다.
② O. 배로의 리카도 대등정리에 따르면 정부지출이 일정한 상황에서 국채 발행은 미래 조세의 현재가치와 같게 인식되므로 조세 조달과 국채 조달은 민간소비와 총수요에 같은 영향을 미친다.
③ O. 피콕-와이즈만의 전위효과는 사회적 혼란기에 국민이 더 높은 조세부담을 받아들이면서 정부지출이 이전보다 높은 수준으로 이동하는 현상이다.
④ O. 브라운-잭슨 모형에서는 중위투표자의 소득이 증가할 때 공공서비스 수요가 충분히 크게 증가하면 정부지출이 국민소득보다 빠르게 늘어 상대적 비중이 커진다.
⑤ X. 틀린 부분은 생산비용의 상대적 상승을 뷰캐넌의 리바이어던 가설과 연결한 것이다. 올바르게는 정부가 수입이나 예산을 극대화하려는 독점적 존재라는 설명이 리바이어던 가설이고, 공공서비스의 생산비용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상승하여 정부지출이 증가한다는 설명은 보몰의 불균형 성장 모형이다.

출제자가 노린 함정

⑤는 정부지출 증가 원인이라는 공통점 때문에 리바이어던 가설과 보몰의 불균형 성장 모형을 바꾸어 연결한 선지이다. 리바이어던은 정부의 예산·수입 극대화 행태를, 보몰은 공공부문의 상대적 비용 상승을 강조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학자 이름 뒤의 원인 변수를 확인한다. 미래 조세의 예상은 배로, 사회적 혼란에 따른 지출의 상향 이동은 피콕-와이즈만, 중위투표자의 수요는 브라운-잭슨, 정부의 수입 극대화는 뷰캐넌, 낮은 생산성 증가와 상대적 비용 상승은 보몰에 연결한다.

암기 포인트

배로는 미래 조세, 피콕-와이즈만은 전위효과, 브라운-잭슨은 중위투표자, 뷰캐넌은 수입 극대화, 보몰은 비용 상승이다.

NoteBase

문 40. 비용-편익 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민간부문보다 공공부문에서 투자계획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데만 활용된다.

② 현재가치법을 사용할 경우, 할인율이 높을수록 장기 사업보다 단기 사업이 유리하다.

③ 현재가치법은 총편익의 현재가치를 기준으로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④ 내부수익률은 어떤 사업의 순편익의 현재가치를 극대화하는 할인율이다.

⑤ 복수의 사업을 비교할 때, 내부수익률법과 현재가치법의 평가 결과는 항상 동일하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비용-편익 분석에서 할인율이 사업기간별 평가에 미치는 영향과 현재가치법·내부수익률법의 판단 기준을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비용-편익 분석은 사업에서 발생하는 편익과 비용을 동일한 시점의 가치로 환산하여 경제적 타당성을 평가하는 방법이다.
현재가치법은 편익의 현재가치에서 비용의 현재가치를 뺀 순현재가치로 사업을 평가한다. 내부수익률은 순현재가치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이다.
할인율이 높아질수록 먼 미래의 편익은 더 크게 할인되므로 편익이 늦게 발생하는 장기 사업이 상대적으로 불리해진다.

선지별 해설

① X — 틀린 표현은 '공공부문에서 … 데만 활용된다'이다. 비용-편익 분석은 공공사업 평가에 특히 널리 쓰이지만 민간부문의 투자계획 평가에도 활용할 수 있다.
② O — 할인율이 높아지면 먼 미래에 발생하는 편익의 현재가치가 가까운 시점의 편익보다 더 크게 감소한다. 따라서 현재가치법에서는 편익 회수가 빠른 단기 사업이 장기 사업보다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③ X — 틀린 표현은 '총편익의 현재가치'를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정한다는 부분이다. 현재가치법은 총편익의 현재가치에서 총비용의 현재가치를 뺀 순현재가치를 기준으로 사업을 평가한다.
④ X — 틀린 표현은 '순편익의 현재가치를 극대화하는 할인율'이다. 내부수익률은 순현재가치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이다.
⑤ X — 틀린 표현은 '평가 결과는 항상 동일하다'이다. 사업의 규모나 편익 발생 시점이 다르면 내부수익률법과 현재가치법이 서로 다른 사업 순위를 제시할 수 있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②에서 할인율 상승을 모든 사업의 현재가치가 단순히 함께 감소하는 현상으로만 보면 장·단기 사업의 상대적 차이를 놓치기 쉽다. 먼 미래의 현금흐름일수록 할인율 상승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다는 점이 핵심이다. 또한 ③의 총편익과 순편익, ④의 순현재가치 극대화와 0을 만드는 조건을 구분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할인율이 변하는 선지는 현금흐름의 발생 시점을 먼저 비교한다. 평가 기준은 현재가치법이면 순현재가치, 내부수익률법이면 순현재가치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인지 확인한다. 복수 사업의 순위가 항상 같다는 단정은 사업 규모와 현금흐름 시점 차이 때문에 일반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암기 포인트

할인율 상승은 먼 미래에 더 불리하고, 현재가치법은 순현재가치, 내부수익률은 순현재가치가 0이 되는 할인율이다.

NoteBase